

특집논문

『사상계』와 그 혹은 그녀의 시대

김복순 |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 로컬-냉전지(知)’의 젠더
-1950년대 『사상계』를 중심으로

김양선 | 195·60년대 여성-문학의 배치
-『사상계』 여성문학 비평과 여성작가 소설을 중심으로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 로컬-냉전지(知)’의 젠더

-1950년대 『사상계』를 중심으로-

김복순*

〈차례〉

1. 전후 ‘말안장 시대’의 ‘재건과 젠더’
2. ‘반공 로컬 운동’으로서의 학술교양과 ‘여성 소거’의 사상화(思想化)
 - 2.1. 젠더화 된 자유·민주·평등과 ‘중첩 로컬’로 ‘재구획’되는 여성
 - 2.2. ‘차별=평등’의 분배적 정의, ‘타락의 주체’로서의 여성
 - 2.3. 자본주의·(신)식민주의 극복 원리, 창부=대모(大母)의 씨을사상
3. 개발의제와 젠더의제의 통합을 위해

〈국문초록〉

1950년대 『사상계』가 탈후진 전략으로 채택한 자유민주주의는 냉전 자유주의, 냉전 민주주의였고, 여성-개인의 자유, 권리, 평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허용치 않는 ‘젠더화 된 자유·민주·평등’ 개념이었다. 여성을 ‘보편-인간’의 범주로 논의한 긍정성은 있었으나, 근대 주체로서의 ‘여성-개인’은 ‘제거’되어 있었으며, ‘반공 로컬’ 중의 ‘또 다른 로컬’로서 ‘중첩 로컬’로 재구획되고 있었다.

개발담론이라 불린 경제적 근대화론에서는 경제적 근대화를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상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첫 번째 계열이 자유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빵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특히 여성들은 ‘타락의 주체’로 명명되면서 ‘개발담론의 주체’에서 ‘소

*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거’되었다. 개발담론은 ‘여성-개인’을 소거하는 대신 ‘현모양처’를 호명하였고, 남녀 역할 분담론에 입각하여 여성을 ‘주부’로 위치시켰다. 즉 현모양처(주부) 주체성으로 한정하였다.

함석헌의 여성은 대모신 개념의 ‘어머니’로서, 고난사관은 이 어머니를 ‘수난의 여왕’으로 위치시켰다. 외세=남성, 민족=여성이란 성적 은유의 방식으로 여성성을 동원하면서, ‘받은 고난 그 자체’로 인해 정화되는 존재로 ‘어머니=창부’로 동일시하였다. 창부=민족=예수라는 등가관계가 제시되면서, 여성 수난사와 관련한 기존의 문법이 파괴되고 해체되고, 세계 구원자=한국이라는 새로운 제3세계 인식을 보여준 긍정성이 있었다. 이는 기독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결과였다. 하지만 함석헌의 씨울-민중사상에서도 여성은 근대적 개인이나 정치적 주체로 설정되지 못하였다. 민중 논의에서도 ‘여성’은 ‘소거’되어 있었다. 세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호명한 여성은 ‘어머니’였지 ‘여성-개인’은 아니었다.

‘반공 로컬’ 『사상계』는 ‘학술교양’이란 이름 하에 ‘반공 로컬’의 정치적 경제적 철학적 과제를 ‘운동’으로서 착실히 수행한 남성젠더-이데올로그였고, 학술교양의 내포 및 외연은 ‘보편으로서의 근대지(知)’라기보다 ‘신식민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냉전지(知)’였음이 밝혀졌다.

개발담론에 의해 ‘전후(戰後)’는 근대와 전근대로 양분되었으며, 근대는 전 세계 담론의 기준이 되었다. 개발담론은 한편으로는 자본 중심국의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저개발 로컬들의 청사진을 위해 동시적으로 동원되었다. 『사상계』가 근대국가 만들기의 방법으로 주장한 ‘과학적 방법’은 자본 중심국들의 ‘방법’을 내면화 한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냉전 자유주의·냉전 민주주의·자본주의·제국주의·식민주의의 방법이었고, ‘여성 소거의 사상화(思想化)’였다.

여성-개인 문제는 『사상계』의 근대화 전략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사상계』는 자유주의·민주주의·민족주의와 여성의 불행한 결합을 보여 주었으며, ‘개발(재건)과 여성’은 배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사상계』의 개발담론은 ‘왜곡’된 개발의제인 동시에 ‘실종’된 젠더의제였다.

핵심어: 탈후진, 냉전 자유주의, 냉전 민주주의, 반공 로컬, 비동맹, 종립, 학술교양, 냉전지, 개발담론, 신식민성, 여성 소거, 현모양처, 창부, 대모신, 장준하, 사상계 경제팀, 함석헌, 젠더의제, 개발의제

1. 전후 '말안장 시대'의 '재건과 젠더'

주지하다시피 전후¹⁾는 재건²⁾의 시대였다. 새로 탄생하는 역사 속에서 '운동하는' 새로운 정신의 현상을 목도하면서 저무는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 질주하던 소위 '말안장 시대'(Sattelzeit)였다.³⁾ 말 위에 올라 온 세상을 굽어 보면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질주하는, 새로운 정신이 도약하던 새 시대(neue Zeit)였다.

이 때의 재건은 근대화를 의미했다. 후진국을 탈피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었다. 하지만 당대의 제 조건을 생략한 채 근대화로만 설명할 때는 많은 실상을 잃게 된다. 전후의 우리 사회는 단순히 근대화를 경주해 나간 사회라기보다, 테어도르 휴즈가 남한을 '우파 위성 국가'⁴⁾라 규정한 것과 같이 극단의 냉전시대였다.

-
- 1) '말안장 시대'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해방 후 약 2년간(공산주의가 불법화 되기 전인 1946년도 중반까지)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전쟁 이후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 2) 재건(reconstruction)은 '전후 복구'라는 뜻으로 '개발(development)'과 의미가 다르다. 『사상계』의 경우 195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개발담론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개발의 범주에 재건을 포함해 다루기로 한다.
 - 3) 말안장 시대(Sattelzeit)란 무너지는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겹쳐지는 시간대를 의미한다. 박근갑은 코젤렉을 말을 빌려, "말이나 자전거의 안장 또는 마주 보는 두 산이 아래 부분에서 서로 맞닿게 되는 鞍部를 의미한다. 여기에 시간을 합성한 말이 자텔차이트다." 저무는 시간과 생성되는 시간이 겹치는 부분, 운동성과 연속성이 중첩되는 시간대를 의미한다. 박근갑, 『말안장 시대의 운동개념』,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2009, 31-60쪽. 대개는 근대 초기를 의미하지만, 우리의 경우 근대가 식민지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획을 시작하는 진정한 말안장 시대는 해방 후부터이며, 해방 후와 또 다른 재건의 의미가 재구성되기 시작한 것은 '전후'라 할 수 있다.

냉전과 근대화가 양립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냉전 시기를 소거하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냉전 체제의 ‘차이’가 소거된다는 점, 서구적 근대화(성)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지향성이 포착된다는 점, 신식민적 제 특성이 은폐된다는 점이다. 냉전성을 고려하게 되면, 우선 신식민적 주체의 담론화 과정 및 당대의 이념적 지평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신식민적 주체들은 의식·무의식적으로 반(反)현실의 총체적인 조직화를 지향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부 냉전을 지속시키는 전략에 저항할 수도 있다.⁵⁾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다. 1950년대에는 자유민주주의, 신생국 민족주의, 실존주의, 국문학 방법론 등 새로운 담론의 창출기관 및 분단 후 처음으로 한국의 이념적 중추를 대중적으로 구성해낸 잡지⁶⁾로, 1960년대에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저항’의 대명사로 불리웠다. 하지만 미국 공보원의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었고,⁷⁾ 『사상계』가 참조했던 잡지 『엔카운터』를 발간한 ‘문화자유회의(Congress for Cultural Freedom, CCF)’도 CIA 자금으로 운영된 바 있다.⁸⁾⁹⁾ 미국의 전후 기획은 ‘대지역 구상’(Grand

- 4) 테어도르 휴즈, 『냉전세계질서 속에서의 해방공간』, 『한국문학연구』 28집, 2005, 4쪽.
- 5) 김복순, 『냉전 미학의 서사욕망과 대중감성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27호, 2012, 108-110쪽.
- 6) 권보드래, 『『사상계』와 세계문화자유회의』, 『아세아연구』 제54권 2호, 2011, 247쪽.
- 7) 장준하, 『장준하문집 3-사상계지 수난사』, 사상, 1985, 86-87쪽. 2호부터 USIS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미국 공보원)과 교섭하여 6개월분의 용지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용지원조는 미국 공보원의 전후 대한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8) 베르트 슈뢰버, 최승완 옮김, 『냉전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대』, 역사비평사, 2008, 126쪽.
- 9) CIA 자금으로 운영되었다 해서 문제삼을 것은 아니라는 논리도 있다. CIA 자금인 것을 모르고 받았으며, 또 그들이 CIA 행동대원도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만약 KGB 자금인 것을 모르고 받았을 때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CIA 자금인 것을 안 후 거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문화자유회의에서 탈퇴하여 조직이 파국을 맞게 된다. 문화자유회의의 파국은 단순히 ‘반 전체주의 노선의 지식과 사상의 시효가 만료됐음을 고지’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사상계』가 즐겨 구독한 『엔카운터』는 문화자유회의와의 관련성을 공공

Area)에 의해 이루어졌으며,¹⁰⁾ 문화활동을 냉전의 무기로 적극 활용하였다. 소련의 경우도 대동소이 해서, 냉전기의 미·소 양 진영은 비정치적으로 위장된 문화활동 사업을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실 여부를 배제한 채 '문화자유회의'의 활동을 적극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냉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은 은폐되거나 약화된다. 『사상계』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의도적이었던 비의도적이었던 이러한 항목들을 강조하지 않거나 소거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냉전적 관점만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발전, 또는 왜곡된 민족문제의 성격과 내용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 할 수도 있다.¹¹⁾ 예를 들어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내의 이념적 대립을 배제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족 문제 또한 미·소 강대국을 매개로 증폭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어느 일방만을 설명틀로 설정할 때는 당대의 실상을 해부하기에, 충분한 설명력을 갖추기도 어려워진다.

전후의 한국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해 재편된 '반공 로컬'¹²⁾에 속해

연히 천명했으며, 문화자유회의는 1950년 전 세계에 35개국의 지부를 건설할 정도의 놀라운 활동력을 보이면서 '자유'를 선전했다. 칼 야스퍼스, 라인홀트 니버, 카뮈 등 전 세계 지식인들의 국경을 넘는 대대적인 연대가 펼쳐졌다. 이들은 공산/반공의 대립이라기보다 전체주의/자유의 대립이었으며, 오히려 열렬한 반공주의에 대해 경계하였고, 그보다 '미국의 가치를 설득'하는데 주력하였다고 한다. 문제는 공산/반공의 대립을 전체주의/자유의 대립으로 치환하는데 있다. '제한된' '가짜 자유'를 '자유'로 이데올로기화 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등이 천명한 신식민성의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회피 또는 은폐하였다. 문화자유회의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가장 구체적이다. 권보드래, 『『사상계』와 세계문화자유회의』, 『아세아연구』 54권 2호, 2011, 246-365쪽 참조.

- 10) 이에 관해서는 필립 맥마이클, 조효재 옮김, 『거대한 역설-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2013; 마고사키 우케루, 문정인 해제, 양기호 옮김,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메디치, 2013 참조.
- 11) 정용욱, 『미·소의 분할점령과 한반도 냉전구조의 형성』,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지식산업사, 2008, 379쪽.
- 12) '로컬'로 보는 것은 냉전부터 21세기 현재까지를 아울러 통찰할 수 있는 관점(예: 세계체제론)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제2차 대전 후의 세계는 미·소라는 '중심'과 주변의 '로컬'들로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블록이란 개념을 사용할 경우 세계의 '중심'과 '주변'이 은폐되고, 단지 물리적 분할로 잘못 이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로

있었다. 미국의 ‘대지역 구상’은 단일한 세계체제의 수립에 바탕을 둔 ‘신 세계질서(New World Order)’를 상징했고,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은 전후 신질서를 위한 핵심지역(A key world area)으로 간주되었다. 대지역 구상 아래 신생국들은 ‘반공 로컬’, ‘공산 로컬’ ‘비동맹 로컬’ ‘중립 로컬’¹³⁾로 분류되고 있었다.¹⁴⁾ 1950년대 신생 독립국들이 비동맹주의를 표방했던 것은 동맹정책보다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신념과, 동서 양진영 간의 분쟁에서 객관적 중재자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된다는 점을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어떠했는가. 본고는 한국전쟁 중 재건에의 의지를 드높이며 이 땅에 새로운 근대국가 건설의 꿈을 불태웠던 잡지 『사상계』를 대상으로 『사상계』의 재건, 즉 근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사상계』는 근대초기 학술교양으로 근대화를 꾀하고자 했던 학술지들의 근대화 ‘방법’과 유사하다. 근대초기 『서우학보』를 비롯한 『대한홍학보』 『기호홍학보』 『호남학보』 『태극학보』 등은 학술교양을 동력으로 삼아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했다. 『사상계』는 근대 초기의 이러한 ‘방법’을 계승한 잡지로서¹⁵⁾ 근대 초기 못지 않게 지

컬로 볼 경우, ‘주체화의 시선’이 배제되고 블록이 지닌 적대-폐쇄성이 약화되는 약점이 있다. 또 1950년대의 한국처럼 아시아 아프리카 블록에 해당되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치 않았던 경우도 있어 블록으로 통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13) 비동맹(non-alignment)과 중립(neutrality)은 흔히 같은 개념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르다. 비동맹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어느 쪽과도 동맹을 맺지 않는 적극적인 의사의 표현을 보인 경우라면, 중립은 국제정치상 권력관계에서 피동적 역할을 하고 고립을 통하여 자국의 안전을 꾀하는 입장이다. ‘행동적 중립주의(Activist Neutralism)’ 또는 ‘적극적 비동맹주의’라 불린 이유는 바로 그때문이다.

14) 반공 로컬로는 실론, 골드 코스트, 이란, 이라크, 일본, 레바논, 리베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Sudan, 타이, 터키, 남 베트남, 한국이 있으며, 비동맹 로컬로는 아프가니스탄, 버마, 캄보디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이 있으며, 공산 로컬로는 중공, 북 베트남이 있다. 중립 로컬은 1815년 강대국들에 의해 보장된 스위스와 1955년 국내법으로 일방적으로 선언된 오스트리아, 그리고 1962년 제네바 회의에서 선언된 라오스가 있다.

15) 『사상계』가 1920년대 문화 민족주의를 계승했다는 연구가 있다. 김건우, 『사상계

성계의 호응을 받은 매체였다. 1900년대의 학술교양 운동은 정치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910년대 중 · 후반부터 이어진 '정치는 빼고 문화만 논의'¹⁶⁾하자는 뜻의 1920년대 문화 민족주의 운동과 다르다.

『사상계』는 스스로를 '종합학술지'로 개념규정 하였으며,¹⁷⁾ 필자는 거의 대학교수이거나 전문가들이었고 독자층으로 설정한 대상도 지식인 · 학생들이었다. 또 게재된 글들도 거의 학술논문에 속하는 전문적인 것이었고, 시사 · 교양 · 문예란 이름으로 연재된 글들도 거의 전문적인 학술 논문에 가까웠다. 즉 『사상계』의 근대화 전략의 토대는 내용상으로 보자면 '학술교양'이었고, 『사상계』의 대중성이란 지식인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사상계』에 대한 그간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좀더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면서 면밀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평가에서는 몇몇 전유가 행해지고 있었다. 첫째는 『사상계』의 창간년도를 글자 뜻대로만 해석하여 1953년도 중반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사상』과 『사상계』를 분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상』은 『사상계』의 전신이라는 정도에서 선후관계로만 처리되었는데, 이 두 잡지는 동일한 잡지라 보아야 한다. 인적 구성 면에서나 잡지의 발간 목적, 방향, 이념 등에서 동일할 뿐더러,

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4. 하지만 '문화 민족주의' 개념은 좀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김건우는 문화 민족주의가 1920년대에 태동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박찬승은 대한제국기부터 한국의 민족주의가 문화적 민족주의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출발하였다고 본다. 박찬승, 『민족 · 민족주의』, 소화, 2010, 50-102쪽. 또 『사상계』 주류 필진들이 '문화 민족주의'라는 하나의 경향성을 띠었던 것도 아니다. 그들은 지연에서는 동일하였지만, 학맥과 종교는 동일하지 않았으며, 이념적 지향도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1960년 이후 다양하게 분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16) 1910년대 후반 이광수와 현상윤의 논쟁에서 이광수는 정치는 빼고 문화만 논의하자고 하였고, 현상윤은 정치적 독립 없이 신문화 건설만으로는 민족이 잘 살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현상윤, 『이광수 군의 '우리의 이상'을 讀함』, 『학지광』 15호, 1918, 55-57쪽; 김복순, 『1910년대 한국문학과 근대성』, 소명출판, 1999, 제2장 참조.

17) 1953년 5월호 표지.

『사상』 5호에 넣을 원고들이 『사상계』 창간호로 이월되는¹⁸⁾ 등 같은 잡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상계』의 창간은 1952년 9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53년도로 볼 경우 전쟁 발발 직후 국민사상지도원으로부터 시작하는 정치적 목적의 사상지도사업이 왜곡, 은폐되고, 『사상계』는 전후의 재건운동과만 연관된다.

또 그간의 평가에서는 『사상계』를 1960년대의 것으로 전유하는 경향이 강했다.¹⁹⁾ 그 결과 ‘독재에 대한 저항성’이 극대화 되어 『사상계』는 전후-1970년대에 이르는 이 땅의 왜곡된 정치문화에 대항한 ‘민족적 저항 잡지’ ‘민족·민주를 추구하다 쓰러진’ 잡지로 뚜렷하게 각인되면서 정치사 및 언론사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다.²⁰⁾

하지만 1950년대로 초점을 맞추어도 동일한 평가가 도출될 수 있을까?²¹⁾ 그간의 평가에서는 『사상계』의 정치성을 그다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또 그간의 평가에서는 『사상계』의 학술내용들이 ‘순수한’ ‘사상’으로, 근대화 지향의, ‘근대 지(知)’로 평가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 한국은 서구와 같은 근대화의 시기가 아니었다. 냉전 논리가 개입된 ‘반공주의’ ‘힘’의 시대였으며, 신식민성에 둔감하거나 애써 의식하지 않으려 한, 제3세계 중에서도 미운 오리새끼였다.²²⁾ 따라서 『사상계』를 단순히 ‘근대지’

18) 장준하, 『브니엘』, 『장준하문집 3-사상계지 수난사』, 사상계, 1985, 78-81쪽.

19) 이상록, 『1960-70년대 비판적 지식인들의 근대화 인식』, 『역사문제연구』 18호, 2007; 이용성,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잡지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37집, 2003.

20) 장준하도 1961년 6월호부터 『사상계』의 수난사가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 ‘수난사 보다는 투쟁사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바 있다. 장준하, 『장준하문집 3-사상계지 수난사』, 사상, 1985, 14-23쪽.

21) ‘낭만적 사랑’으로 『사상계』를 분석한 결과 매우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 ‘낭만적 사랑’은 근대의 기획 중 하나에 속한다는 점에서 『사상계』의 근대적 기획의 구체내용 및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김복순, 『낭만적 사랑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1950년대 『사상계』와 『여원』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9권 3호, 2011.

22) 이승만 정부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중립·비동맹 로컬들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이들에게 한국은 ‘자유진영의 두통거리’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된다. 고정훈, 『아이빨럭과 한국 외교정책』, 『사상계』 82호, 1960.5, 136쪽.

‘사상’ 잡지로 자리매김 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본고는 『사상계』를 ‘제’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1962년 정치평론지로서의 성격변화를 이루기 전, 1960년 김영선 편집위원이 장면 정권에 입각하기 전, 즉 『사상계』의 성격변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1950년대를 대상으로²³⁾ 『사상계』의 재건(근대화)의 논리, 국가·민족·시민의 개념 및 역할을 재검토할 것이며, 특히 젠더와의 연관 하에 『사상계』의 근대성의 실체를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여성성은 근대성의 특수성인 만큼 젠더 범주는 다른 결과를 도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상계』 담론과 관련한 젠더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하다.

2. ‘반공 로컬 운동’으로서의 학술교양과 ‘여성 소거’의 사상화(思想化)

2.1. 젠더화 된 자유·민주·평등과 ‘중첩 로컬’로 ‘재구획’되는 여성

『사상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장준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상계』가 곧 장준하²⁴⁾’라고 불릴 만큼 초기에는 1인 잡지나 다름 없었다. 장준하는 한국전쟁 당시 문교부 산하 국민사상연구원에서 국민정신계몽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피난 수도 부산에서 1952년 9월 잡지 『사상』을 발행한다. 국민사상연구원은 1951년 ‘국민사상을 연구지도’하기 위해

23) 김영선이 재무부장관으로 입각하면서, 그의 협조 요청으로 사상계사 내에 ‘국제연구소’를 두고 『사상계』 편집위원을 주축으로 한 국내의 학계, 언론계, 문화계, 경제계의 저명인사 30여 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 지원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또 대표적 필진 중 한 사람인 신상초는 군부에 협력하게 된다. 장준하, 『장준하문집: 사상계지 수난사』, 사상계, 1985, 32-33쪽.

현실정치에 가담하기 시작하는 1960년과 장준하가 『사상계』를 떠나고 편집진이 대폭 바뀌는 1967년을 소시기 구분점으로, 1963년을 중시기 구분점으로 본다. 1963년은 한일회담이 시작되는 해이다.

24) 박경수, 『장준하-민족주의자의 길-』, 돌베개, 2003, 6쪽.

문교부 산하에 설립되었던 국민사상지도원이 명칭을 변경하여 개칭된 것이었다.²⁵⁾ 전시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왜 전쟁을 하는가’ 하는 전쟁목적과,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새로운 사상체계를 수립할 필요를 절실히 느낀 한국은 공산주의의 선전과 반미·반서구의 인식, 식민 이후의 고조된 민족주의의 도전 속에서 동요하고 있었다. 국민사상지도원은 공산주의의 제거와 신질서 건설을 위한 국가차원의 사상지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²⁶⁾ 새로운 사상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각 분야의 지식체계를 재편하는 한편 공산주의 이론의 비판, 서구 및 일본 사상에 대한 비판, 새로운 지도사상의 모색, 새로운 윤리·도덕 체계의 확립을 꾀하고 있었다. 이는 1951년 11월 중공군의 대공세 이전에 이미 기획된 것으로서,²⁷⁾ 당시 총력전이 사상전의 형태를 띠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민주 우방으로의 편입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상』의 창간 주역들은 1951년 당시 문교부 장관으로 있던 백낙준이

25) ‘국민사상’을 ‘강제로 지도’한다는 오해를 사기 쉽다는 의견에 따라 1952년 국민사상연구원으로 개칭되었다가 1956년 그 직제가 폐지된다. 『사상총서』·잡지 『사상』의 발행, 각종 사상강좌 개최 계몽순화 강연, 선무활동 등을 통해 국가의 이념 담론을 생산하였다. 국민사상연구원과 잡지 『사상』의 주요 필자 및 발행인이 동일하다. 김기석, 배성룡, 이병도, 백낙준 이교승, 장준하 중 앞의 3인은 잡지 『사상』을 비롯한 국민사상지도원 명의를 간행물의 주요 필자이자 전문위원이었고, 백낙준과 장준하는 각각 국민사상연구원의 원장과 기획과장이었다. 이교승은 『사상』의 발행인이었다.

26) 김봉국, 『1950년대 전반기 국민사상연구원의 설립과 활동』,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10, 8쪽.

27) 전쟁 이전에 사상의 문제는 이미 단독정부 대한민국의 핵심적 의제였다. 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 『제헌국회속기록』 2, 여강출판사, 1987. 689쪽; 『경향신문』 1949.4.20의 『이승만 대통령, 일민주의 정신과 민족운동에 관하여 담화를 발표』, 이밖에도 ‘민족정신 고양’ ‘국민사상 선양’ 등 각종 대회들이 개최되었고 학도호국단을 비롯한 각종 단체들이 주요 강령 및 활동 내용에서 사상적 통일을 촉구하고 있다. 『민족정신고양 전국문화인총결기대회 취지서』, 『국제신문』 1948.12.21 참조, 한편 이러한 작업은 보도연맹-전향 작업을 통한 국민 만들기의 과정이기도 했다. 『국민보도연맹 서울시본부주최 국민사상선양대회』, 『동아일보』 1949.12.20. 국민보도연맹 등을 통한 전향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이봉범, 『단정수립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대동문화연구』 64집, 2008 참조.

만든 '국민사상지도원'의 회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간행목표는 창간사에 드러나 있듯 '대공투쟁을 위한 사상전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 이는 『사상계』 창간사에서도 확인된다. '조국의 통일과 부흥재건은 무역에 의한 전쟁의 승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이 전민족의 지향과 이상을 하나로 귀합시킬 수 있는 사상과 이념의 통일이 선행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상』이 정치적 이유로 폐간되자²⁸⁾ 그 후신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계'자를 하나 더 붙여 『사상계』를 간행하였는데,²⁹⁾ 이러한 사정들은 『사상』 『사상계』의 활동이 순수한 학술활동이나 아카데미즘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것임을 알려 준다. '형식적으로만 정부 산하 연구원의 기관지일 뿐 순수한 일반교양을 추구하는 내용'³⁰⁾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2호부터 미국 문화정보국의 용지지원을 받는 등 정치성이 동반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사상전'³¹⁾이라 부르기 어렵고 '이데올로기전'으로, '반공 로컬'의 '운동'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권력적·정치적으로 기획되었고, 문교부 장관 직속으로 설립되었으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다는 것은 일반 계몽사업의 수준을 넘어 권력의 최상층이 직접 관여하였음³²⁾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반공을 공고히 할 사상체계를 마련해야 했던 지배세력은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구축하는 한편, 냉전체제 속에서 새롭게 미국의 헤게모니 진영으로 편입하는 논리를 스스로 준

28) 이기봉과 박마리아는 백낙준을 라이벌로 느끼던 차, 이승만에게 백낙준이 발간하는 『사상』에 대해 그 필자그룹이 주로 홍사단 계열과 비판적 인사들이니 그대로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고, 『사상』의 민간 발행인인 이교승에게는 『사상』에 대해서는 자금을 끊으라 지시한 후 곧 폐간되었다 한다. 백낙준이 사직한 것도 이 것이 사유가 되었다 한다. 박경수, 『장준하, 민족주의자의 길』, 돌베개, 2007, 236-237쪽.

29) 체호 글자체도 『사상』을 써 주었던 오기석에게 받아 두 잡지의 글자체가 동일하다.

30) 박경수, 『장준하, 민족주의자의 길』, 돌베개, 2007, 233쪽.

31) 한국전쟁 및 국민사상지도원의 역할을 '사상전'이라 본 것은 김봉국, 『1950년대 전반기 국민사상연구원의 설립과 활동』,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10에서이다.

32) 김봉국, 『1950년대 전반기 국민사상연구원의 설립과 활동』,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10, 22쪽.

비해야 해야 했다. 국가의 사상체계를 건설하는 한편 ‘새로운 국민 만들기’의 작업이었다.

『사상』 『사상계』가 학술교양의 형태로 명시한 이데올로기 전략의 기초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였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³³⁾이 있는데, 첫째는 정치적 근대화론(자유민주주의론)이고, 둘째는 경제적 근대화 우선성의 신생국 민주주의론, 셋째는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론의 입장으로 민중 중심의 민주주의론이다.

1) 민주주의 사회는 두 개의 원칙 위 에 서 있다. 하나는 개인의 자유요, 또 하나는 인격의 평등이다. ……민주주의가 내세우는 개인은 자주할 줄 알고 자치할 줄 알고, 자율할 줄 알고, 자립할 줄 아는 사회적 자각의 주체로서의 개인이다. 나의 자유를 존중하는 만큼 남의 자유를 존중할 줄 알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시에 남의 권리를 옹호하는 개인이다.³⁴⁾

2) 자유라 함은……자율에 의한 구체적인 힘을 말함이며 이 구체적인 힘 중에도 대표적이며 근본적인 힘은 경제력·정치력임에 틀림없다. ……자유가 그 사회의 각 구성원에게까지 갖추어지려면 일정한 계급의 자유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는 사회기구는 변혁되지 않아서는 아니됨과 동시에 ‘힘’이 사회 일반에 균등하게 편재하고 경제력이나 정치력이 사회 일방에 편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³⁵⁾

33) 이상록은 『사상계』의 자유민주주의를 ①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화 병행론 ② 산업화 우선의 신생국 민주주의론 ③ 근대화론에 비판적이었던 민중 중심의 민주주의론으로 나누는 바 있다. 하지만 1950년대는 아직 산업화 단계라 부르기 어렵다. 이상록은 『사상계』를 1960년대의 것으로 전유하는 경향이 있다.

34) 장준하, 『개인의 의미』, 『사상계』 75호, 1959.10.

35) 장준하, 『자유 수호를 위한 일언』, 『사상계』 10호, 1954.2, 8-9쪽; 『민주주의의 재인식』, 『사상계』 52호, 1957.11; 『비판정신의 창달을 위하여』, 『사상계』 7호, 1953.10 · 11 합병호 참조.

장준하는 창간사에서부터 '자유·평화·평등·번영의 민주사회 건설에 미력을 바치고자'한다고 하였지만 민족의 자주성을 해치는 자유·민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여 놓고 있다. 민족의 자주성이 침해받았다고 판단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강조했던 법을 비롯한 민주주의·자유주의의 이념 및 방법은 제거되거나 유보된다.³⁶⁾ '정치적 자유는 그 자체도 기본적인 것이지만 보다 큰 민족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 더욱 중요한 것이다'³⁷⁾에서 확인되는 장준하의 민족 개념은 '민족이 최우선 가치다'라는 주장 속에서 최상의 가치로 격상된 것이며, 이로 인해 자유·민주 개념은 절대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강등되고 제한된다.³⁸⁾

부정되고 제한된 자유, 민주 개념은 '보편으로서의 자유·민주'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 또는 이해관계 앞에서 부정되거나 축소·제한되는 자유·민주의 개념은 '보편'이 아닌 '특수'로서의 자유·민주 개념이다. 장준하가 의미했던 자유·민주·평등 개념은 1950년대 한국적 현실(특수성)이라는, 하버마스가 말한 '특정 맥락(specific context)'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 특정 맥락은 냉전체제 하의 반공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장준하의 민족, 민족주의 개념은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서구식 민족주의와는 다르다.³⁹⁾ 따라서 장준하의 자유·민주 개념은 반공 자유주의, 반공 민주주의 또는 냉전 자유주의, 냉전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것이 온당하다.⁴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에는 언론과 사상의 자유 및 다양

36) 좌담회, 『우리는 현 한일회담을 반대한다.』 『사상계』 133호, 1964.4.

37) 장준하, 『민족주의자의 길』, 『장준하 문집 1』, 사상, 1985, 58쪽.

38) 민족, 민족주의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용어이다. 크게는 민족(nation)이 근대에 들어와 형성되었다고 보는 근대주의자와, 역사적 토대로서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에스니(ethnie)의 존재를 지적하는 역사주의자들로 대분된다. 전자에는 겔너, 앤더슨, 홉스봄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앤서니 스미스가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후자의 입장에 따른다.

39) 김대영, 『장준하의 정치평론 연구 1』, 『한국정치연구』 제11집 제2호, 2002, 161쪽; 이용희 외, 『한국의 민족주의』, 한국일보사, 1975, 29쪽.

40) 박찬표도 냉전 자유주의라 정의한 바 있다.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참조.

성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냉전 자유주의이다. 자유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체제경쟁을 위해 희생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을 ‘보편으로서의 자유’주의 범주에 넣을 수는 없다.⁴¹⁾

장준하는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합법정부, 유엔군의 지원으로 국토를 보존하는 땅 덩어리, 유엔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의 국제적 토대’⁴²⁾라 언급한 바 있다. 즉 장준하의 민주주의 개념은 반공 로컬(자유진영)이란 세계 안에서 받아해서 성장하는 정치이념인 것이다. 반공 로컬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저버릴 경우 한민족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여, 반공 로컬에서의 고립을 우려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분단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내세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은 따라서 ‘반공 로컬’의 조건 안에서만 정당성이 있는 개념으로서 ‘보편으로서의 자유·민주’와는 거리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적대적인 파시스트나 공산주의와는 구별되는 민주주의 요소를 강조하고 있고,⁴³⁾ 냉전의 현실적 세계질서를 담고 있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서양 근대정치사상사에서 계몽사상은 공동체와의 연결고리를 분리시켜 ‘개인’을 공동체로부터 독립시키면서 사상과 역사의 주체로 내세웠다. 정치사상의 핵심적 논제도 ‘시민의 덕성’(citizen’s virtue)에서 ‘개인의 권리’(individual’s right)로 그 초점이 옮겨졌다. 이 주체로서의 개인은 객체를 대상으로 많을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이것이 개인의 독립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시작이기도 하였다.⁴⁴⁾

41)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1960년대까지를 ‘전후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한다. 김복순, 『냉전 미학의 서사욕망과 대중감성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27호, 2012, 128-129쪽.

42) 장준하, 『민족외교의 나아갈 길』, 『씨올의 소리』, 1973, 11, 『장준하 문집 1』, 36쪽.

43) 장준하의 민주주의는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공산주의에 반대하지만, 국내적으로는 독재에 반대한다. 독재에 반대하여 자유민주주의적 기본권을 보장할 때 비로소 공산주의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후 『사상계』를 통해 유포된 학술교양은 이와 반대로 개인보다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권리보다 시민의 덕성을 주장하였다. 또 계몽사상으로부터 시작된 근대정치사상이 인간의 이성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완성시켜 나갔다면, 『사상계』를 통해 개진된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보다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지니지 못한 것이었다.

국민사상지도원부터 『사상』 『사상계』를 장준하와 함께 참여했던 전문위원 중 김기석은 『사상계』 전체를 통틀어 여성에 대해 논의한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⁴⁵⁾ 장준하와 근대화의 이념 및 방법이 거의 일치하므로 김기석의 논의를 통해 『사상계』 주류 멤버들의 여성관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⁴⁶⁾

김기석은 「민주국가와 여성의 지위」라는 글에서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 해방된 국가의 책무이며, 민주주의는 인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라 말하여 장준하와 동일 선상에 있음을 드러낸다. 그런데 김기석의 인민 개념에는 '여성'이 제거되어 있다. 민주국가는 민주주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고, 민주주의는 인간 평등관을 기초로 한다고 하면서도 이 때 평등이란 민족, 성별, 소질, 교양, 지위가 아니라 '사람인 면'이 같다고 해석한

44) 박의경, 「근대정치사상에서의 여성과 자연」, OUGHTOPIA, 2010.

45) 『사상계』에서 '여성'을 제목에 넣어 본격적으로 여성에 관한 논의를 한 논문은 극소수이다. 이는 창간 년도 및 발간 년도를 거의 비슷하게 공유하는 『여원』과 매우 다른 부분이다.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호, 2007.

46) 『사상계』 필자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1953년부터 편집위원 체제를 두고 발간하였으며, 1955년부터는 전문 편집위원 제도로 운영하여 일정한 논조를 가지게 되었다. 장준하, 「브니엘」, 『장준하문집: 사상계지 수난사』, 사상계, 1985; 유경환, 「『사상계』 15년 소사, 1953-68년」, 장준하선생20주기 추모문집간행위원회, 『광복 50주년과 장준하』, 장준하선생20주기 추모사업회, 1995. 『사상계』 필진들이 '차이' 속에서도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기본 개념을 공유했음은 이상록, 「『사상계』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론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0, 233-238쪽.

다. 김기석은 ‘평등이 단순한 동등, 동일, 동량, 동질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남녀에 구별이 있음을 전제한다. 그런데 이 ‘구별’은 절대적 차별태, 계급적 차별태가 아니고 조화의 차별태, 협동의 차별태라고 주장 아래 ‘차이’가 아닌 ‘차별’의 정당성으로 언명된다.

3) 男女平等이라고 해서 女性들이 男性의 자리를 빼앗는 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平等이 아니라 侵略인 것이니, 侵略을 당해 마땅할 정도로 남을 侵略했던 자 侵略됨은 조커니와 덮어노코 밀고 쓰러버린다고 하면 미는 것과 함께 밀리지 않으려는것, 또한 自然한 形勢로서 거기에는 심한 衝突과 混亂이 올 따름입니다. 男女平等, 女性解放은 이같은 단순한 壞亂 相衝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⁴⁷⁾

4) 진정한 意味의 男女平等은 男性 또는 女性이 人間으로서 자기와 남을 새로 建立, 發見하는일이요 단순한 復讎나 模倣이 아닐것입니다. 男女平等이란 男性 또는 女性이 자기들을 바른 人間으로 자각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⁴⁸⁾

김기석은 위에서 보듯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것을 평등이라고 보지 않았다. 여성의 권리 찾음, 즉 평등해지려는 욕구를 남성의 자리를 빼앗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남성들도 기득권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김기석에게 남녀평등이란 남성이나 여성이 ‘바른 인간’으로 자각하는 것이지 남성의 지위와 운명을 전복시키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즉 남녀평등이란 자리를 갖고 쟁탈하는 ‘위치전환’이 아니라 ‘자각전환’이다. 김기석은 현재의 문제점이

47) 김기석, 『민주국가와 여성의 지위 하-여성문제연구원창립을 기회로-』, 『사상계』 3호, 1953.6, 91쪽.

48) 김기석, 『민주국가와 여성의 지위 하-여성문제연구원창립을 기회로-』, 『사상계』 3호, 1953.6, 94쪽.

오히려 여성상실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5) 形式的으로 男性의 자리가 女性에게 맡겨졌다고 해서, 이를테면 國會議員이나, 長官이나, 大學教授나, 會社重役이 맡겨졌다고 해서 女性의 地位가 과연 올라간 것이겠습니까. ……

民主國家에 있어서의 平等이란 자세히는 人格의 平等으로서, 女性은 男性에 대하여 그 同等한 人格이 認定되어야 하고, 또 그 人格이 守護 顯彰되어야 합니다. 民主主義 社會가 되어 法律앞에 모든 人民이 平等하다고 하여 女性에게도 市民으로서의 모든 權利, 특히 選舉權 被選舉權이 주어 진것까지는 좋거니와, 이 女性의 選舉權이 어떤 個人이나 黨派의 票數를 늘리는데 利用 買收되었다고 하면, 단순히 女性들이 選舉權을 가졌고 또 그것을 使用된다는 事實만을 가지고는 男女平等이 成就되었다고는 못할 것이고 이 女性자신의 票數가 女性의 社會的 地位를 끄러나리는데 使用될 憂慮조차 없다고 못할 것입니다. ……人間으로서의 自覺이 男女平等의 根本前提라고 할 수 있습니다.⁴⁹⁾

김기석은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으로 분류하면서, 형식적 평등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미 1948년 제헌헌법이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참정권을 언급하고 있었음에도, 평등과 사회적 지위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면서 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 상승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평등과 사회적 지위 상승은 별개의 차원의 것이다. 혹 있을지 모를 부작용 때문에 형식적 평등에 해당하는 피선거권 등을 주기 어렵다는 논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여성에게 평등이 주어졌을 때의 혼란 및 부작용을 극단적으로 과장하면서 김기석이 내린 결론은 남녀평등이란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가지는 것이다. 남성의 자리를 ‘위치전환’하여 빼앗으려 하지 말고 여성들은 인간으로서의 자각

49) 김기석, 『민주국가와 여성의 지위 하-여성문제연구원창립을 기회로-』, 『사상계』 3호, 1953.6, 95-96쪽.

을 꾀하는 ‘자각전환’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남녀평등이라는 주장이다. 김기석의 논의에는 ‘차이’가 아닌 ‘차별’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별’이 남녀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평등의 결과로 해석되어 있다. 김기석의 논의에서 평등이란 개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사회현실 속에 숨어 작동하는 진짜 권력관계가 은폐된다. 사회 내의 불평등한 위계구조와 권력관계가 원칙적으로 거부된 평등주의라 할 수 있다.

물론 김기석의 이러한 ‘젠더화된 평등’ 개념의 유효성도 있다. 남녀평등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어, 여성을 ‘보편’으로서의 ‘인간’ 범주에 넣으려는 동기부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젠더 고정적인 제도·풍습·관행을 타파하고 모든 영역에서 ‘인격’적으로나마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이전 시기의 차별론을 일정하게 극복하고 있다. 양성평등이 21세기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일정 정도 긍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기석이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권리의 체계’로 이해하기보다 ‘의무의 체계’로 이해하는데서 연유한다. 김기석은 행복=쾌락으로 연결시키면서 공리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 쾌락에는 개인의 쾌락과 감각적 쾌락이 있는데 김기석은 이를 향락으로 이해한다. 그는 공리주의가 리와 쾌를 제일의 목표로 내세우는 한 그것은 변장한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면, 특히 여성의 ‘권리’를 쾌락과 연결시킨다. 현대가 봉건주의 계급과 도덕을 폐지하고 형식적인 가족제도를 타파한 점은 인정하지만 자유연애는 비판한다. 권리를 쾌락으로 이해한 탓에 특히 여성들의 ‘자유연애’는 부정된다. 남성의 자유연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여성들만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기득권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공리주의-여성의 권리-쾌락의 연결고리 하에 여성의 권리는 부정되고 의무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 평등, 민주는 ‘남성’에 해당하였지 ‘여성’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계급적 평등, 신분적 평등 등 계급, 신분 등과 관련한 평등이 언급되고 있지만, 성별 평등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다. 즉 여성은 아예 ‘제

거'되어 있다. 여성은 '반공 로컬' 중의 '또 다른 로컬'로서 '중첩 로컬'로 재구획 되고 있다. 식민지 시기 '제2의 이등국민'이었던 여성들⁵⁰⁾은 해방을 맞은 독립국에서도 '중첩 로컬'로밖에 자리매김 되지 않았다. 이러한 민주, 평등, 자유, 인간관은 '이데로서의 민주주의가 하나의 과제로 맡겨진'⁵¹⁾ 단독정부 한국의 사회현실에 기인하며, 가부장제 지배구조에서 평등이 차별로 구획되는⁵²⁾ 모습을 보여 준다. 1950년대 잡지 『여원』이 권리로서의 여성의 자유 뿐 아니라 여성해방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던 바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⁵³⁾

장준하와 김기석에게서 보듯 첫 번째 계열에서의 민주, 자유, 평등 개념은 당시 한국의 사회현실과 밀접히 관련되어 규정된 '특수'로서의 개념들이다. '보편'으로서의 자유, 민주, 평등의 개념이 있다면, 김기석의 민주, 평등의 개념은 냉전체제 하 한국의 특정한 사회현실이 반영된 '특수'로서의 민주, 평등이라 할 수 있다. '자유'의 개념에서도 '이념과 사상의 국가적 통일을 전제로 한 경우'로 분리하는 '제한적 자유'를 '보편으로서의 자유'라 부르기 어려워 '냉전 자유주의'라 규정하듯이,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틀지워진 평등, 주체로서의 여성을 배제하는 민주란 개념도 '특수로서의 민주', '특수로서의 평등'으로서, '젠더화 된 자유 · 민주 · 평등'이었다.

여기서 김기석의 평등 개념에 입각한 민주주의 개념을 확정짓는 제일의적 요인이 '냉전'인가 하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즉 냉전이 우선성을 갖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지만 두 번째 계열과 달리 첫 번째 계열은 '냉전체제'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유지하고 있었다. 김기석은 불란서 · 영국 · 미국 · 소련이 '이미 낡은 민주주의의 나라, 병신된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보고 있으며, 이들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해야 할 것으로

50) 김복순, 『최정희론: 나는 여자다-방법으로서의 젠더』, 소명출판, 2012 참조.

51) 김기석, 『민주국가와 여성의 지위 하-여성문제연구원창립을 기회로-』, 『사상계』, 3호, 1953.6, 98쪽.

52) 二宮厚美, 『ジェンダー平等の經濟學』, 新日本出版社, 2006, p.75.

53)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호, 『여원』 특집, 2007, 참조.

보지 않았다. 질서와 도리를 함부로 깨뜨리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⁵⁴⁾라면서 김기석은 민주주의가 개체해방의 원리이지만 굴레를 벗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멍에를 메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헛된 인습, 그릇된 전통에 반항하여 새로운 기초 위에서 개인 및 사회를 튼튼히 쌓아 올리는 것’인데 민주주의 사회의 주체로서 개인의 권리를 가진 인민들이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장준하도 ‘외군의 군정을 통한 혼돈상태를 보았’고⁵⁵⁾ ‘남한에서의 미군정은 민족정기를 말살시키고 이 사회의 기준을 전복시켰으며 부패와 타락을 북돋우워 놓았다’⁵⁶⁾고 함으로서 미군정 및 미국의 자본주의 문화를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장준하에게 ‘허트러진 사회기준을 세우고 민족정기를 세워 민족의 살 길을 개척’하는 과업이 중차대 했듯이 김기석에게도 가장 시급한 것은 ‘민족의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는 것’, ‘새로운 도덕을 세우는 일’⁵⁷⁾이었다. ‘개인은 개인의 틀을 위해서가 아니고 민족의 틀을 위하여 살고 또 죽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계열에서는 서구 동경의 시선을 거두는 한편 동양의 고전적인 민족 개념으로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 또한 강조한다. 여기서는 ‘정치’(민족) 우선성이 작동하는 가운데 근대화가 강조되고 있기에 서구 자본주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숭앙하지도 추종하지도 않았다. 냉전체제 하에서 분단국가가 되었지만 스스로 가진 ‘동양’ ‘한국’ 민족의 자존감과 긍정적 덕목으로 새 시대를 개척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려면 ‘과학적’ 방법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장준하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 먼저 요청되는 것은 ‘개척정신과 과학적 방법’이라 역설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과학적 방법이란 ‘재건’ ‘개발’ ‘부흥’의 방법으로서, ‘비합리성·감성’이 아닌 ‘지성·이성’의 방법이었고, 감성로부터의 이성의 독

54) 김기석, 『신세대의 도덕』, 『사상』 4호, 1952.12, 20쪽.

55) 장준하, 『이념과 방향』, 『사상계』 6호, 1953.9.

56) 장준하,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사상계』 68호, 1959.3, 15쪽.

57) 김기석, 『신세대의 도덕』, 『사상』 4호, 1952.12, 17쪽.

립58)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고려대학교 총장이었던 유진오는

6) 지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다마는 가령 야만이라든지 비합리성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과 공통된다고 하겠지만 감정이라든지 이런데 대립되는 개념으로 지성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면 그러한 지성은 훌륭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본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지성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갈구하는 민주주의의 기반도 거기 있다고 하겠지요.59)(144)

유진오의 위와 같은 주장에 팔봉도 동의하면서 ‘객관현상을 정확하게 관찰, 인식 반영하는 것이 지성’이라 역설한 바 있다. 즉 당시 『사상계』의 논자들은 새로운 근대 국가는 과학적 방법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구체적 방법은 비합리성·감성이 아니라 합리성·지성이라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선진국/후진국의 대비적 관점 하의 탈후진 전략 중 하나였다. 자본 중심국들의 이념을 내면화 한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60) 냉전 자유주의, 냉전 민주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이념을 포함한 것이었다.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남성=지성, 여성=감정이라는 성적 은유 도식을 형식적으로는 비판61)하면서, 근대 국가와 관련하여 “애국은 ‘감정’이 아니고 ‘과학적 이념’이어야”한다62)고 주장하는 부분이다. 윤세원은 진정한

58) 김기석, 『신세대의 도덕』, 『사상』 4호, 1952.12, 13쪽.

59) 좌담회, 『건전한 사회는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사상계』 38호, 1956.9, 144쪽.

60) 과학의 가치중립성은 편견 없음을 표방함으로써 편견을 일반화 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가진다. 근대의 과학이 ‘남성의 과학’이었음은 샌드라 하딩, 조주현 옮김, 『누구의 과학이며 누구의 지식인가』, 나남, 2009 참조.

61) 김기석, 『민주국가와 여성의 지위-여성문제연구원창립을 기회로』, 『사상계』 3호, 1953.6.

62) 장준하,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사상계』 68호, 1959.3.

의미의 진보는 과학적인 척도를 기준으로 진폭이 일정하지 않은 예술과 철학과 사상의 세계가 가진 율동의 무분별한 조합을 정리시켜 앞으로 전진시키는데 있다⁶³⁾고까지 역설하였다. 진보의 방향을 갈피잡지 못하면 맹목적인 추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진보와 과학적 세계관과의 관련성 뿐 아니라 과학적 방법이 동원되지 않을 경우 영원히 후진국으로 뒤떨어지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신응균은 우리가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야 하고 과학의 발달에 민감한 것은 남북 대치의 군사관계 때문⁶⁴⁾이라고 실토한다. 즉 냉전성이 과학적 방법의 필요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과학적 방법이 비록 냉전성에 의해 요청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서구 자유주의의 ‘미달태’라기보다 제3의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과거의 일본적 방법도, 새로운 미국적 방법도 부분부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공 로컬이었지만 ‘비동맹’ ‘중립’로컬과는 ‘또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씨앗으로부터 받아하여, 특히 장준하와 함석헌의 사상은 1960-70년대의 ‘저항적 민족주의’로 이어지는 것이다.

경제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논리가 드러난다. 경제분야에서 과학적 방법이란 한국자본가의 특징을 이윤추구 지상주의, 관권과의 결탁, 일인 독재로 규정하면서 자본가들은 경영을 합리화·과학화 하고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⁶⁵⁾

장준하도 과학적 방법과 관련하여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성취될 수 없음은 동서의 사실(史實)에 역연한 바이기에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결단코 8년 내에 이룩된 민주주의의 완성⁶⁶⁾이고, ‘민주국가를 바랐고 세웠고 이를 육성하여 오고 있다’⁶⁷⁾ 고 하여 민

63) 윤세원, 『국가와 과학』, 『사상계』 58호, 1958.5, 210-221쪽.

64) 좌담회, 『우리 사회와 문화의 기본문제를 해부한다』, 『사상계』 57호, 1958.4의 신응균의 발언이다.

65) 이정환, 『한국의 기업가정신』, 『사상계』 81호, 1960.4, 82-83쪽.

66) 장준하, 『민주주의의 재확인』, 『사상계』 34호, 1956.5.

67) 장준하, 『민주정치의 확립을 위하여』, 『사상계』 64호, 1958.11.

주주의를 현재는 미숙하지만 점점 더 완숙해가는, '변화'하는 민주주의로 보고 있다. 즉 '나이를 먹는'⁶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정환도 『한국의 기업가정신』에서 정부의 과학적이고 과단성 있는 정책으로 역사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하여 국가건설과 관련한 방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첫 번째 계열에서 학술교양을 통해 유포되는 사상형식은 냉전 자유주의, 냉전 민주주의, 반공주의, 젠더화였으며, 여성들은 '중첩 로컬'로 재구획되고 있었다. 이들은 냉전체제 하 한국의 근대화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주요 기제였다. 이들이 추구하는 과학적 방법은 냉전성에서 기인되었지만, 탈후진 전략 및 신식민성 타과의 방법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긍정성을 지닌다.

2.2 '차별=평등'의 분배적 정의, '타락의 주체'로서의 여성

양호민, 차기벽 등 이른바 신생국 민주주의론을 주창한 지식인들과 '사상계 경제팀'은 경제적 근대화론에 더욱 집착하였다. 이들은 우선 경제적 근대화를 이룬 다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한국의 제일 과제라 인식하였다. 홍성유는 일국 단위의 경제발전 정도를 중심으로 '선진국 대 후진국'이라는 구도로 배치하면서,⁶⁹⁾ 후진국도 일정한 경제규모가 되면 선진국이 된다고 역설하였다. 이들의 근대화 개념은 정치·경제·사회 문화의 제 요소 중 특히 경제 우선성의 근대화로 개념화 되면서, 선진국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과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증'을 드러내고 있었다. 신생국 민주주의론은 '정체(停滯)경제에서 '발전'경제로 이행⁷⁰⁾하여 경제적 근대화를 추구하자는 것이었다. 성창환을 비롯하여 이상구, 유창순, 이정환, 이동우, 이창렬로 구성된 사상계 경제팀은 '공

68) 김대영, 「장준하의 정치평론 연구 2」, 『한국정치연구』 제12집 2호, 2003, 155쪽.

69) 홍성유, 「선진국 대 후진국」, 『법률과 경제』 제1권 6호, 1954.7.26; 「장기경제계획의 제문제」, 『사상계』 60호, 1958.7.

70) 홍성유, 「새로운 정책원리의 발견」, 『사상계』 142호, 1965.1.

산주의는 빈곤에서 싹튼다’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⁷¹⁾ 사상계 경제팀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 『사상계』에 경제 관련 논설을 기고하며 『사상계』의 개발담론을 주도하였다. 이들의 주요 논지는 민간주도의 자유경제체제만으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없고, 국가주도의 산업화 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 및 경제자립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었다.⁷²⁾

1956년부터 경제분야 편집위원으로 합류한, 경제팀의 좌장격이었던 성장환은 농촌의 부흥도 근대적 광공업의 육성에 의해서만 타개할 수 있다고 보면서, 농업과 공업의 동시적 발전이 아니라 공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⁷³⁾만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장준하에게서는 민주주의와 경제적 근대화가 상호보완적 관계로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들에게서는 경제적 근대화가 우선성을 갖고 민주주의보다 먼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⁷⁴⁾ 즉 경제적 근대화 다음에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순차적’인 것이었다.

두 번째 계열에서는 근대화가 직선적 발전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선진국, 후진국,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이란 용어도 직선적 발전과정 상의 단계를 지칭하는 근대화론의 개념이다. 이러한 근대화론을 강력하게 이론화 한 것도 미국이었다. 선진국으로 가기 이전 단계의 저개발국

71) 성장환, 『한국경제와 케인즈 경제학-케인즈경제학은 후진국경제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사상계』 33호, 1956.4.

72) 정진아,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사학연구』 105호, 2012, 321-364쪽. 정진아는 『사상계』의 근대화 담론이 군사정권의 근대화론·개발담론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기존 평가에 반대한다. 공통점은 어느 정도 있지만, 가교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73) 성장환, 『빈곤에서의 해방-경제 안정과 변영의 길』, 『사상계』 41호, 1956.12, 213쪽.

74) 사상계 경제팀이 ‘민생’에 초점을 맞추었던 데 반해, 군사정권은 민족과 국가의 부흥이라는 추상적인 목표에 역점을 두었고, 사상계 경제팀은 민주주의와 근대화 문제를 분리해 사고한 적이 없지만, 군사정권은 근대화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선후의 문제로 분리시켰기 때문이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정진아의 논문 결론에서만 나타나는 주장이고, 본문에서 논증된 바 없다. 정진아,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사학연구』 105호, 2012 참고.

가 경제발전론이 지역학의 발전과 결합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의 틀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로스토우가 있었다. 로스토우는 경제발전의 제 단계를 체계화 함으로써 후진국들의 발전 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⁷⁵⁾ 이 이론틀에서 각국은 하나의 연속선 또는 '개발의 사다리' 위에 위치하며, 한 단계씩 다음 단계로 넘어 간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 중심국과 저개발의 '반공 로컬' 또는 '공산 로컬'들은 '근대화론'이란 점에서 일정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었다. 시장을 확대하고 원자재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의 세계를 재편하려던 미국은 한 나라 한나라마다 각국 차원에서 잘 살게 될 수 있다는 '발전' 사상을 국제 프로젝트로 제시하면서 세계를 제패하려 하였고,⁷⁶⁾ 일국 단위의 '발전'을 이끌어내야 하는 신생 독립국의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본 중심국과 로컬들 사이의 이러한 연계성은 '독립 속의 의존'(dependence in independence)이었다. 멕시코의 구스타보 에스테바(Gustavo Esteva)가 논평했듯이, '저발전은 전후에 탄생'한 것이다.

전 세계의 20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저발전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그들은 정녕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잃게 되었고 타자의 현실을 거꾸로 비추는 거울 속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이 거울은 저개발국 인민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제시한 것은 서구권의 일방적이고 편협한 소수 인류였다.⁷⁷⁾

즉 전후는 전 세계를 근대와 전근대로 양분한 것이나 다름 없었으며, 개발(재건)과 근대는 전 세계 담론의 기준이 되었다. 그것은 세계관이나

75) 박태균, 『원형과 변용-한국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135쪽.

76) 이는 영국 제국이 추구했던 '외향적 발전 모델(세계의 공장)과는 다른 것이었다. 영국 제국이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공장화 하는 것이었다면, 미국의 방식은 '내향적 모델'로서 일국 단위에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77) Gustavo Esteva, "Development", *The Development Dictionary*, edited by Wolfgang Sachs, London: Zed, 1992, p.7.

다름 없었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개발담론은 한편으로는 자본 중심국의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저개발 로컬들의 청사진을 위해 동시에 동원되었다. 사상계 경제팀이 주장한 근대화 및 재건과 진보, 아시아적 후진성이란 개념은 서구 및 서구인들에 의해 형성된 이분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힘은, 마치 개발이 보편적이고 자연스럽고 그래서 아무 문제없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식민 지배의 뿌리는 숨긴 채 자본 중심국들은 로컬들의 노동과 자원을 착취하며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로컬들의 모든 가치는 평가절하되었고 이전에 자본 중심이 로컬들에게서 배운 점들도 무시되었다. 길버트 리스트(Gilbert Rist)는 ‘신생 국가들(로컬들)이 자기 규정권(right to self-definition)을 포기하는 대신 자기 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을 얻었다’고 하였다. 이는 로컬들이 ‘자본 중심적 개발이 표준이 된 미래’ 세계를 ‘선택’하였음을 의미한다.⁷⁸⁾ 배성룡은 한 논설에서 ‘구미 선진국에 오늘의 한국적 정치현실이 있다고 가정하여 보라’⁷⁹⁾면서 한국의 정치현실을 비판하였다. 서구인들이 구성한 인식틀로 자신을 규정짓는 방식이었고 한국의 후진적 현실을 ‘구미 선진국’이라는 거울에 비춰 구성하고 있었다. 장준하를 비롯한 사상계 경제팀의 발전·성장 지향성에 입각한 재건 담론은 이러한 서구 의존형 개발계획을 수용한 결과였다.

경제적 근대화 우선론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경제적 근대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사상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첫 번째 계열이 ‘자유’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 계열은 ‘뺑’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헌법학자인 한태연은 공산주의로부터의 파괴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질서를 해

78) 필립 맥마이클, 조효재 옮김, 『거대한 역설-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2013, 94-101쪽.

79) 배성룡, 『그 국민에 그 정치』, 『사상계』 29호, 1955.10, 69쪽.

치는 활동은 방지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보안법의 제정은 극히 필요한 내용⁸⁰⁾이라 하였다. 사상계 경제팀의 이정환도 후진국이 산업을 육성하고 자립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를 계획하고 '간섭'해야 하며, 보호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였다.⁸¹⁾ 성장환도 후진국이므로 자유주의만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고 보고 강력한 통제방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⁸²⁾ '계획'과 '간섭'의 형태로 국민, 기업체, 각종 경제 단위는 일정 정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논지로서, 경제적 근대화와 민주주의 실현의 우선성 및 순서가 드러나 있다.

'경제적 자립 없이는 정치적인 자주도, 진정한 독립도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논지였다. 따라서 '소비생활을 절제시키지 못하면 경제성장이 희생될 것'이기 때문에 제한을 가해야⁸³⁾ 한다는 것이다. 그간의 원조물자 도입이 소비재에 치중되어 온 점도 일관되게 비판되었다. '부흥 도상에 있는 나라로서는 생산재 성격을 띤 원재료의 기계 및 수송 부분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절약, 근검, 내핍 등은 상찬된 반면, 외래품 사용 등의 무분별한 각종 소비행태, 경제적 자립을 해치는 행위, 부패와 비능률, 빈곤의 악순환을 부르는 주범들, 경제적 근대화를 방해하는 공산주의 활동 등은 격렬하게 비판되었다. 반공 로컬의 경제적 근대화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은 제한을 가해 마땅했다. 편집위원이었던 안병옥은 공산주의가 '빵의 배급이라는 미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려 한다'고 비판하였지만⁸⁴⁾ 『사상계』 또한 이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논지 아래 '특히 여성'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가해졌다. 변시민은 광대한 개방성의 사회가 되고 자본주의적 구조가 되면서 그로 인한

80) 한태연, 『한국에서의 자유』, 『사상계』 65호, 1958.12, 25쪽.

81) 이정환, 『경제적 자유』, 『사상계』 65호, 1958.12, 41-42쪽.

82) 성장환, 『한국경제와 케인즈 경제학-케인즈경제학은 후진국경제에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사상계』 33호, 1956.4.

83) 이창렬, 『대한경원의 변천소고』, 『사상계』 22호, 1955.5, 108쪽.

84) 안병옥, 『자유와 아포리아』, 『사상계』 65호, 1958.12, 63쪽.

병리현상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사회는 문화적 통일체, 집단적 통일체, 감정의 통일체인데, 병리현상은 이 사회적 조화·통일을 파괴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한국에서 ‘역사’는 전통적인 가치로서가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대치하고 있다고 분석한 후, 변화를 본질로 하지만 가치를 본질로 하지 않는 ‘유행’과 그 유행에 ‘자체의 통일성을 잃어버린 여성’을 비판한다. ‘외국에서 수입된 자유주의는 무쾌도한 유한 자유부인의 모랄’로, ‘구미제국의 싸움은 사교와 대합실 대행의 다방으로 대표되었다’면서 특히 ‘여성의 자유=일탈’로 본다. 이러한 일탈은 외국문화의 왜곡화에서 오는 비극으로서, ‘건전한 존재’일 수 없는 여성들의 왜곡 및 일탈은 ‘선진국에 따르려는 노력으로서 열등감을 증장시킬 뿐이다.’⁸⁵⁾ 남성에게 사교, 자유는 기회이자 권리였지만 여성에게 사교 등의 자유는 ‘일탈’로 해석되었으며, 외국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하고, 열등감을 증장하는 존재로 인식, 비판되어 있다.

이밖에도 여성을 ‘타락’과 연관지어 비판한 논자는 많았다. 『우리는 사회악에 항쟁한다』(1956.10)는 좌담회에서, 윤흥중은 양갈보와 사창을 ‘민족을 썩히는 페스트균’이라 비난한 바 있으며, 이갑성은 여학생과 부녀자들이 허영에 날뛰어 동방예의지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부덕과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져 어지럽다면서, 여학생과 부녀자를 ‘부도덕과 허영’의 기호로 비난하였다. 정 준도 성도덕의 타락이야말로 모든 사회악 중 최악의 악이라면서 여권의 민주주의적 신장을 위해서라도 절대 배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좌담회에 참여한 여성 논자 박순천이 최대의 사회악을 ‘정부의 거짓말’이라 언급한 것과 매우 다른 시각을 보이는 것이다.⁸⁶⁾

이들의 글에서 확인되는 여성에 대한 비판은 대개 ‘타락상’과 연관되어 있다. 댄스, 파마, 패션 등에서 서구식은 남성들의 위기와 관련하여 비판

85) 변시민, 『현대사회의 병리』, 『사상계』 42호, 1957.1, 38-46쪽.

86) 남성 논자와 여성 논자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 2007, 참조.

되었으며, 한국적 부덕의 여성이 새로운 여성상으로 제시되었다. 1950년대 재건과 관련된 여성의 역할은 '현모양처'였다. 현모양처란 댄스를 하지 않고 파마도 하지 않는 한국적 부덕을 겸비한 여성으로서 새로운 근대주부로 제시되었다. 즉 당시의 현모양처는 '근대적' 주부 모델이었지만 '서구화'되지 않고 '전통적' 부덕을 갖춘 여성을 일컫었다. 즉 근대화≠서구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후 남성들의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성 지배'의 문제가 '성 차별'로 선택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리엔탈리즘이 해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역사상 이러한 의미의 조합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 여성-개인은 '주체'가 될 수 없었다. 여성 중 오직 '아내와 어머니'만이 주체가 될 수 있었으며, 가정은 최후의 보루였다. 앞에서 다룬 바 있는 김기석도 나중에는 '여성은 성을 초월하여 남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⁸⁷⁾고 주장하였으며, 함석헌도 교육의 주체로는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가 어머니이며, 둘째는 소·중학교 선생님, 셋째는 목사⁸⁸⁾라면서 교육 주체로서의 어머니를 특히 강조하였다. 유달영은 가정이 마지막 방파제이며, 이를 위해 여성의 교육이 필요하다⁸⁹⁾고 하였다. 여성-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회를 지키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주부는 자녀 교육과 가사의 주체⁹⁰⁾이지 권리와 자유를 담지한 여성-개인이 아니었다. 따라서 가사를 직접하지 않고 식모에게 맡기는 것도 비판되었다. 『사상계』의 교양 분과 편집위원이었던 안병옥도 젊은 이들의 반항이 '가정의 따뜻한 애정이 없어서'⁹¹⁾라고 말하면서 사회 문제를 가정 문제로 치환하기까지 하였다. 이들의 논리에서는 '타락의 주체'인 '여성-개인'은 소거되고 여성은 아내·어머니로만 호명되었다.

또 김경탁은 '된다'라는 생성이 한정될 때 비로소 사유작용이 일어난다

87) 김기석, 『사랑의 현상학-에로오스와 아가페에-』, 『사상계』 8호, 1953.12, 71-72쪽.

88) 좌담회, 『건전한 사회는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사상계』 38호, 1956.9, 135쪽.

89) 유달영, 『아름다운 생명들』, 『사상계』 62호, 1958.9, 146쪽.

90) 좌담회, 『문화가의 주변』, 『사상계』 68호, 1959.3, 191-192쪽. 오화섭의 발언이다.

91) 안병옥, 『기성질서에 대한 레지스탕스의 구조』, 『사상계』 69호, 1959.4, 36쪽.

면서, 내가 나 아닌 것으로 생성하는데는 두 가지 노선이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자연생성이요, 또 하나는 문화생성인데, 처녀의 흥조는 자연생성이지만, 이를 생리적 변화에만 맡겨두지 않고 어머니로 되어 가고 있다고 깨닫는다면 그것은 문화생성이다.

7) 그리하여 지금까지는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딸, 또는 오빠의 누이동생이었지만 나는 장차 어떤 사람의 미래의 아내요, 또 어머니가 될 사람이다. 그러면 미래의 아내다운 아내, 어머니다운 어머니, 즉 현모양처가 될 준비를 하여야 하겠다고 한다. 현모양처로 생성되는 데는 유방과 자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요, 가치를 창조하려고 노력하는 처녀가 되어야 한다.⁹²⁾

어찌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맥일 수 있는 이 글이 문제되는 것은 여성의 아내화, 어머니화만 언급하고 있지 여성 자신의 자유, 권리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현모양처 규범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자각한 여성만이 '각성한 인간'이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탁도 언급하다시피, 현모양처의 규범화는 '문화'라는 구성작업으로서, 여성들을 '문화'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자 '구성물'로서 위치짓는 것이다. 이송녕도 「대학사회를 친다」라는 글에서 '여자대학이 유행의 근원을 만든다'⁹³⁾면서 당대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긍정적 가치를 담지하지 못한 여자 및 여자대학을 타락의 주체라고 비판한다.

이희봉의 글에서는 남녀평등이 아예 부정된다. 남녀는 생리적 조건과 성정이 다르므로 그에 따라 직능과 직분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기인하는 차별적 규정은 남녀평등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의 남녀평등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한다.⁹⁴⁾ 이희봉은 이러한 차별을 분배적 정의에 의한 평등으로 본다. 이희봉은 한국이 주권국가가 된지 10

92) 김경탁, 「내 생각 이모저모」, 『사상계』 46호, 1957.5, 246쪽.

93) 이송녕, 「대학사회를 친다」, 『사상계』 46호, 1957.5, 211쪽.

94) 이희봉, 「내가 본 민법안」, 『사상계』 47호, 1957.6, 116-123쪽.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일본의 구민법을 사용하는 것은 국치라면서 시급히 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주주의를 건국이념으로 헌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달을 위하여 경제적 민주주의를 표방하였으며 또 한편 인간평등의 이상 밑에 남녀평등을 규정하였으니, 이러한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현행 민법의 양육강식의 자유경쟁의 기초와 인간의 본질적 평등에 위배되는 남녀불평등의 원칙을 불식해서 한국민의 실생활에 있어 민주주의를 구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신민법은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한 시민 간의 양육강식의 자유경쟁을 제어하고,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남녀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차별적 규정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희봉이 말하는 시민이란 남성을 의미하지 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여성은 차이를 배태한 존재이므로 실질적 평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희봉은 남녀 간의 차별적 규정이 분배적 정의라 하였는데, 분배적 정의의 개념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⁵⁾

일찍이 정의론 연구자인 로버트 노직이 분배적 정의의 개념은 '중립적'이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듯이, 여러 능력(capabilities)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분배의 중요성은 왜곡, 훼손될 수 있다. 실제로 이희봉은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니고, 직능과 직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 하에 이희봉은

95) 분배적 정의란 이익(재·서비스·기회·지위·권능 등)이나 부담(세·역무 등)의 분배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재화가 정당하게 분배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제기하는 것이다. 즉 본래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이상적인 상태를 규정하는 것이다. 분배적 정의의 대상은 정치적 체제를 함께 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이다. 명예나 부와 같은 것의 분배와 관련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동등한 몫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성립하는 부분적 정의가 바로 분배적 정의이다.

신민법이 택한 부부별산제는 분배적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므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대신 호주상속 또는 친권에 대해서는 남자 우선주의를 택하였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에 합당하다고 평가한다.

신민법은 개인의 자유평등에 입각하여, ‘재산법’ 분야보다 ‘신분법’ 분야에 개혁의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⁹⁶⁾ 구 민법이 ‘처’를 ‘무능력자’로 규정하여 법률 행위에 있어 夫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면, 신민법은 이 규정을 없앴으로써 헌법이 내걸었던 남녀평등의 원칙을 구현했다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그밖에 부부별산제도나 재판상 이혼원인 상의 부부평등을 실현하였으나, 친족범위 설정, 계모자 관계 설정, 적모 서자 관계 설정 등에 있어서는 남녀불평등을 드러냈다.

1950년대에는 관습존중론, 점진개혁론, 남녀평등론의 세 가지가 나타났다. 앞의 둘의 경우 즉각적인 남녀평등 실현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크게 관습(전통) 존중론과 남녀평등론으로 나누어진다.

8)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자식도 애비한테 뭇 효도할 것도 또 부양할 것도 없이 저 원시적으로 돌아가란 말입니다. ……이것 남녀동등이란 정치 사회 문화 이 방면에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이 남녀동등입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부모나 자식 사이에도 마누라나 남편 사이에도 이것 동등 찾다간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것이 지금 폐해가 얼마가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도의가 떨어지고 윤리가 지금 무너져 가지고 패덕, 패륜지사는 지금 날마다 신문을 더럽히고 매일같이 법정에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⁹⁷⁾

9)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정치적 민주주의도 필요합니다. 경제적 민주주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본 민주주의의 실천장은 가정이어야 할 것이올

96) 강영애, 『신민법과 여성의 지위』, 『법정학보』 3호, 1960, 152쪽.

97) 국회사무처, 『국회속기록』 제26회 제30호, 1957.11.6, 4-12쪽; 이은경,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145쪽에서 재인용.

시다. 원만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상적 가정, 이것은 확실히 민주주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민주주의 가정을 우리들이 이룩하기를 이상이고, 목표라고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남녀평등이어야 할 것이요, 아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요, 아내를 우리들이 인간으로 대하기 전에는 우리는 문자 상의 평등, 필요 없습니다.⁹⁸⁾

8)은 가족법이 ‘전통’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부계주의적 가족제도가 민족의 존립을 결정하는 요소로 확장되어 있으며, 평등주의를 구현하는 것은 ‘민족적 전통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됨과 동시에 ‘도덕의 타락’으로 연계되고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평등(동등)은 정치사회적으로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윤리’와 남녀평등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남녀평등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서, 남녀평등을 관습, 전통, 가정 윤리보다 ‘하위’에 놓고 있다.

이러한 이해방식은 무차별적 평등이 전통적 질서, 즉 부계주의를 위태롭게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⁹⁹⁾ 물밑 듯이 쏟아져 들어 온 서구문화로 그간의 관습과 전통은 파괴되기 시작했는데, 가장권의 약화로 인한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전통이 강조되고 남녀평등 또한 제한적 의미로만 사용할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도의교육의 기본 방침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사상계』 편집위원으로 활약했고 여러 번 좌담에도 출연한 백낙준이 ‘민족정신을 재발견’하여 ‘민족재건을 위한 도의교육의 지주를 삼자’고 역설하면서 국가 사회가 요청하는 국민적 과제로 중시¹⁰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¹⁰¹⁾ 즉 ‘도의 재건-인간 재건-사회 재건’ 논리로 이어지는 틀을

98) 국회사무처, 『국회속기록』 제26회 제50호, 1957.11.30, 14-15쪽. 정일형 의원 발언.
이은경,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157에서 재인용.
99) 이은경,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147쪽.
100) 백낙준, 『도의교육의 제창』, 『교육주보』, 1952.1, 한국교육문화협회 편, 『한국교육과 민족정신: 용재 백낙준박사선집』, 문교사, 1953, 59-61쪽.

형성하였다.

이와 반대로 9)에서는 가족법 제정의 기본 원칙은 헌법의 남녀평등 정신과 민주주의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 논자는 8)의 논자가 주장하는 전통과 관습, 미풍들이 ‘사실은 남존여비의 봉건사상에 지나지 않음’을 비판하면서 세계 각국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우리의 관습법과 같은 구시대의 유물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남녀평등은 동정심이나 자비심이 아니라면서, 법을 공평한 견지에서 보지 않고 ‘남자의 견지’에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제도를 전복하려는 음모와 똑같은 행동이라고 까지 역설하였다. ‘노동자의 이익만도 못한 권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자에게 적용되고 있다’며 관습론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였다.

이처럼 당대 의견은 관습존중론과 남녀평등론으로 대분되어 있었는데, 『사상계』는 원론적으로는 남녀평등론을 역설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반대하는 논조의 글을 실었다. 『사상계』는 사회 영역에서는 자유·민주를 부르짖었으나 가족 영역에서는 남녀평등론에 반대하는 논조를 펴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앞에서 본 바 이희봉 교수는 남녀의 직능 및 직분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분배적 정의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당대에 민주적 쾌거라고까지 언급된 부부별산제는 가정경제권을 夫가 가지는 것이 맞다며 강력하게 반대하였고, 호주상속에서 남자 우선주의는 분배적 정의에 합당한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여기서 보듯 두 번째 계열의 민주주의는 여성-개인과 거의 ‘무관’한 것이었으며 남녀평등과도 거리가 ‘먼’ 것으로서, 부계주의·남성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즉 『사상계』가 창간 때부터 중시했고 창간사에도 명백하게 강조되어 있는 자유, 평등, 민족이라는 개념은 때에 따라 편의적으로 전통과 민주주의를 넘나들면서 선택적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남녀평등론과 관련하여서는 대체적으로 전통론과 결부되어, 남성의 자유를 위한 개념으로 활용되었으며, 이 때의 차별적 규정이 바로 『사상계』가 말하는 평등

101) 좌담회, 『건전한 사회는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사상계』 38호, 1956.9.

이었다. 다시말하자면 『사상계』의 평등 이념은 남성·민족 우선성 속에서 왜곡되어 있었고, 여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정일형 의원의 말처럼 ‘평등’이 아니라 ‘차별’이었다.

2.3. 자본주의·(신)식민주의 극복 원리, 창부=대모(大母)의 씨울사상

1950년대 『사상계』에서 가장 이질적인 논자를 꼽으라면 함석헌이다. 스스로도 ‘이단자’라 언급¹⁰²⁾했듯이 1950년대 『사상계』에서 도드라져 보인다. ‘씨울’이라는 낯선 용어로 민중 주체를 이야기 하는가 하면, 후진국에서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1950년대 『사상계』의 논자들이 골몰하고 있을 때 함석헌은 자본주의적 발전 정도를 가지고 선진/후진으로 나누는 인식론, 강대국/약소국으로 이분법화 하는 그 자체를 문제 삼았다.¹⁰³⁾ 5.16에 대해서도 장준하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쿠데타를 지지하였으나, 유독 혼자만이 군사쿠데타는 혁명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혁명은 민중혁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혁명은 민중이 해야 할 일이지 군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¹⁰⁴⁾라는 것이다. 또 민주주의 인식과 관련하여서도 달랐다. 필자 대부분의 주류적 민주주의 인식은 제도로서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긴급한 문제라는 것이었다. 일부 필자들은 이러한 과제를 후진성 탈피와 근대화 실현이란 맥락에서 강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함석헌은 이와 달리, ‘민중이 직접, 전체가 하는 운동’¹⁰⁵⁾으로 규정한다. 장준하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근대화 논리에 집중하면서 냉전성 및 신식민성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것에 반해, ‘참 해방은 조금도 된 것이 없다’, ‘또 다른 데 종으로 팔렸다’ ‘전에는 상전이 하나였

102) 함석헌, 『이단자가 되기까지』, 『사상계』 72호, 1959.7.

103) 함석헌, 『수난의 여왕께 드리는 유언·예언』, 『사상계』 105호, 1962.3, 43쪽.

104) 함석헌, 『5.16을 어떻게 볼까』, 『사상계』 96호, 1961.7.

105) 함석헌, 『5.16을 어떻게 볼까』, 『사상계』 96호, 1961.7. 민중을 위하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오직 스스로 민중이 행하는 정치만이 민주주의라고 하였다.

는데 대신 지금은 둘 셋이다'¹⁰⁶)고 함으로써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다. 근본적으로는 글의 문체적 특징과 관련하여, 그의 글은 감정적이고 격정적이고, 은유적이고 직관적이기까지 하다. 문장도 종결되지 않은 채 중도 반단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듣도 보도 못한 순 한글 용어들이 개념화 되어 놀랍게도 구사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은 함석헌을 매우 이단자처럼 보이게 한다.

함석헌 사상의 핵심은 씨울이라 명명한 바, 민중 중심의 세계관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열의 논자들이 민족, 국민, 시민으로 접근하면서 근대 국민 국가 주체의 자유·민주·평등 등에 착목했다면, 함석헌은 씨울로 접근한다. 씨울은 민중의 의미 뿐 아니라 때에 따라 민족, 인류 등으로 치환되기도 한다.¹⁰⁷) 씨울을 민중으로 메타포 할 때의 민중 개념은 계급적인 개념이 아니라 '고난을 감내하는 피지배층' 즉 하층의 기층민으로서, 종교적 개념이다.¹⁰⁸)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설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치권력에 저항하는 주체로 설정한 그의 인식은 1950년대라는 시대의 구속성에서 볼 때 확실히 탁월하다. 개념적 무기로서 민중은 상당한 유효성을 가졌고, 그의 민중론은 당시 지식인들의 정치인식을 급진화 시키는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함석헌이 민중과 함께 내세우는 '전체'라는 개념은 '개체'에 대비되는 것이지만, '개인'은 아니고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종교적 개념이었다. '나는 개인 아니다. 나는 아버지(전체)와 같이 있는 나지 개인이 아니다. 개인이란 건 거짓이다'¹⁰⁹)면서 개인은 전체를 위해

106)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사상계』 34, 호 1965.4, 27쪽.

107) 하지만 민중 개념은 대로 국민, 민족, 시민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사상계』 34, 1965.4 등 참조. 씨울에 대해 함석헌은 네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선(善을) 혼자서 하려 하지 않고 둘째, 너/나가 있으면서도 너/나가 없으며, 셋째 네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가 아닌 참 마음 넷째, 우리는 전체 안에 있고 전체는 우리 하나하나 속에 다 있다. 『씨울의 참 뜻』, 『민중과 한국신학』, 한국신학연구소, 1982, 14쪽.

108) 이상록, 『함석헌의 민중의식과 민주주의론』, 『사학연구』 97, 2008, 157쪽.

109) 함석헌, 『사상과 실천-사회에 강건한 기풍이 서야만 멸망에서 생을 보전할 수 있

희생·헌신할 때 비로소 사람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¹¹⁰⁾ '전체'는 도덕적 선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¹¹¹⁾이라 보았다. 그는 건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새윤리'를 '선으로서의 전체'를 향해 나아가는 민의 도덕적 실천에서 찾았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가 지상주의와 민족 지상주의에서 벗어나는 것 둘째, 남녀관·결혼관이 깊고 깨끗해지는 것 셋째, 종교 종파의 싸움을 버리는 것 넷째, 기계를 바로 쓰는 것이라 하였다. 첫째에서는 어떤 이념도 우상화 되어서는 안 되며, 세계질서 안에 민주 민족문화를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공산주의도 거부되었다. 계급윤리로는 세계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체에 이르는 윤리는 '인격의 주장'으로 될 것이지 '생존권의 주장'으로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에서는 성의 윤리화, 聖化가 강조되었다. '모성에 없는 곳에 인격을 생각할 수 없다면서 결혼이 아니 고는 모성애가 발휘될지 의문이라 하였다. 오늘날 남녀도덕의 타락은 자본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며, 정조야말로 인격적 생명을 꿰뚫는 원리라 하였다. 셋째에서는 한 종교의 절대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라면서 '한 종교에 이르는 것은 모든 종교로만 될 것'이라며 종교의 절대화를 부정하고 상대화시켰다. 넷째에서는 '현대 문명'의 이기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전체의 균형이 깨치고 통일을 잃고 멸망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격에 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위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함석헌이 자본주의, 물질문명, 민족 지상주의, 국가 지상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비판하고 인격을 바탕으로 '전체'로 서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체'에 해당하는 '한' '하나'가 차이를 인정

다. 『사상계』 41호, 1956. 12쪽.

110) 함석헌 연구자인 김성수에 의하면, 씨울은 개인의 의미를 내포하며, 전체론은 '성숙된 개인주의'라고 해석한다. 함석헌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개인인 것은 물론이지만, 그 개인의 뒤에는 언제나 전체가 서 있다'는 의미의 개인을 생각했다는 것이다. 김성수, 『함석헌평전』, 삼인, 2001, 189쪽.

111) 함석헌, 『새倫理(상)』, 『사상계』 33호, 1956.4.

하지 않는 ‘절대화 된 개념’이라는 점이다. ‘한’ ‘하나’는 ‘물질적·정신적 우주의 근본’으로서, 모든 민족, 모든 사회의 문화가 ‘한’에서 나왔고 ‘한을 목표로 나아간다’고 함으로써, 민족문화 간 차이, 그 문화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차이’ 등이 ‘사상’된다. 즉 ‘차이의 정치’가 작동할 여지가 거의 없다. ‘씨올이야말로 가지각색’이라 언급하면서도 ‘그렇지만 하나다’를 중국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가지각색의 ‘차이’는 ‘하나’ 속으로 ‘녹아버린다’. 내부의 차이를 진정 인지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은 함석헌의 사상에서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다. ‘밟히는 존재로서의 풀’들도 제각기 하나의 개성을 지니고 있지만, 함석헌에게서는 오직 끊임없이 돌아나고 짓밟히는 풀의 ‘속성’만이 중요할 뿐 다양한 정체성과, 쓰러지는 풀, 눕는 풀, 쓰러졌다 다시 일어서는 각각의 풀들의 개성, 개별자들의 ‘차이’는 ‘전체’로서의 속성(민중적이라는)에 의해 무화되거나 소거된다.

이 ‘한’ ‘하나’의 중심에 있는 것 중 하나가 ‘어머니’이다.

10) 여자는 풀무요 용광로다. ……모든 역사 모든 문화의 낡은 찌꺼기와 썩음을 벗겨 치우고 새 시대를 짓는 새사람은 반드시 여자의 텃집 속에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혁명은 여자의 텃집 속에서 시작된다. 여자는 아기를 낳는다. 역사를 이어 가는 생명의 고리는 여자라는 풀무 속에서 저 거룩한 대장장이의 신비의 손으로 이어진다.¹¹²⁾

11) 어머니 대한민국이시여! 당신의 지극히 작은 아들의 하나요, 당신의 노한 채찍 끝에 문드러져 떨어지다 미는 이 한 덩어리 피는 울음으로 당신 발을 붙들고……거룩하고 밝고 올바르고 크신 당신의 어진 마음에 호소합니다.

어머니 대한민국이시여! ……새나라 주춧돌(漢擎) 발에 밟고 서시어, 삼천 폭 치마 안에 삼천만 씨알 품으시며五千年 긴 역사의 밤 필력거리는

112) 함석헌, 『젊은 여성에게 주고 싶은 말』, 『함석헌전집 5』, 한길사, 1989, 42-44쪽.

등잔을 지켜 밝는 날의 입을 맞이하자는 한밝음(太白)의 여왕이시여! ……

어머니 대한민국이시여! 고난의 여왕이시여! ……당신이 줄고 촛불이 꺼진 동안 당신은 도둑을 맞고 짓밟힘을 당한 것입니다. ……

어머니! 무엇을 못해도 이 불쌍한 씨알들을 한테 안으시고 한테 어우러져 통곡이라도 하게 하셔! ……

어머니가 별거벗기우고 쫓겨나셨던 이 8월 29일, 이 글을 쓰자니 만 가지 생각에……113)

여기서 어머니는 풀무, 신비한 손의 대장장이, 대지의 모든 것을 품고 보듬는 한 없이 큰 어머니로 형상화 되어 있다. 10)에서 실제 호명되는 것은 ‘어머니인 여자’이다. 텃집을 가진 어머니, 아기를 낳는 ‘어머니’이다. 11)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머니를 대한민국과 동일시 한다. 조국, 민족, 국가는 바로 이같이 ‘모든 씨알들을 한테 안는’ 큰 ‘대지의 어머니’이다. 6.25와 같은 씨알 간의 싸움을 그만 두게끔 대지의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품어 안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지의 어머니 즉 대모신(Great Mother)은 인간 생명 뿐 아니라 자연의 생명력까지 관장하는 우주 그 자체를 포함한 모든 것의 어머니로서, 양쪽 극단의 선과 악의 속성을 공유한 통일적 형태로 존재한다. 대모신은 때로는 무서운 어머니이면서도 자애로운 어머니이기도 하고, 고통의 어머니이면서 기쁨의 어머니이기도 하다.¹¹⁴⁾ 어머니는 함석헌의 세계관 원리인 통전성(統全性)¹¹⁵⁾이 잘 드러난 경우에 속한다.

함석헌에게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있다면 이 ‘대지의 어머니’가 ‘창부’와

113)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를 풀어 밝힌다」, 『사상계』, 1958.8, 107-108쪽.

114) 노이만, 서승옥 역, 『원형적 여성과 대모』,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115) ‘전체로 통일하는’것을 일컫는다. 함석헌, 「우리 민족의 역사와 생활신념」, 『함석헌전집 1』, 375쪽. 함석헌의 철학을 통전성으로 본 것은 정대현, 「유기적 생태론의 통전성 존재론 모색」,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10, 104-115쪽 참조.

동일시 된다는 점이다. 대지의 어머니는 민족 수난사 속에서 창부로, 갈보로 수난 당한 존재였다. 한민족의 역사는 대모를 창부로 만들고 수난 받게 하였다. 어머니를 질곡 속으로, 억압 속으로 밀어 넣어 각종 수난과 고난의 여왕이 되게 자리매김 하였다. 고난과 수난의 ‘여성’이라 하지 않고 ‘여왕’이라 부른 것은 이러한 대모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준다.

함석헌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를 비롯해 여러 논문으로 당대의 여타 논자들과 사상적, 종교적, 이념적 논쟁을 벌이는데,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를 풀어 밝힌다』는 글에서는 ‘나라없는 백성이라 함은 우리는 이렇듯 둘로 갈라진 나라의 한 쪽을 지킴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옷, 밥이나 얻어 먹으면 됐다 하고 멀쩡히 있으리만큼 비열하고 작고 겁쟁이 국민이 될 수 없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면서, ‘수난의 여왕인 우리 엄마의 정신이 맑아지고 이 씨알의 맘이 밝아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은 ‘생각하는 백성이 아닌’ 창부 또는 몸을 더럽힌 여인 등 성적 비유를 통해 민족 또는 국가의 정체성을 이야기 하는 점이다.

12) 밤거리를 헤매다가 도둑놈에게 욕을 본 계집도 그 상하고 더러워진 몸을 어루만지며 생각을 해 본다면 그 까닭이 어디 있음을 알 것이이요(26)¹¹⁶⁾

13) 이 역사의 행길에 앉는 고난의 여왕은 제 욕 보고 뺨김 당한 것이 어떤 까닭임을 생각하나 아니하나?(26)

14) 여우 같고 계집 같은 소위 측근자(側近者) 비서 무리들 보고 울어 무엇 해? 나라의 주인은 고기를 바치다 바치다 길거리애 쓸어지는 민중이지 벼슬아치가 아니다.(28)

116) 12)-14)의 인용은 함석헌,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를 풀어 밝힌다, 『사상계』 1958.8의 쪽수이다.

15) 혈 벗고 두 다리를 벌려 역사의 큰 길거리에 앉은 受難의 女王아, 늙은 갈보야, 네 모든 비참을 중국놈께 팔아 먹고, 일본 놈께 뺏기고, 만주놈께 짓밟히고, 러시아놈께 도둑맞은 그 부끄러움, 분함을 원통 한테 몰라117)

16) 이 민족이야말로 큰 길가에 앉은 거지 처녀다. 수난의 여왕이다.118)

17) 지난날 큰 길 가에 앉았던 갈보는 그 받은 고난으로 정화되어 여왕이 될 것이다.119)

18) 세계의 하수구요, 공창(公娼)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120)

12)는 6.25가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으로 외세에 의해 일어났으며, 특히 여성의 희생으로 의미화 하고 있다. 전쟁에 의한 피해는 여성의 성과 관련하여 외세=남성, 약자인 민족=여성으로, 성적으로 은유되고 있다. 13)도 역시 같은 맥락이며, 14)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부패·비리가 측근자에 의해 행해졌으며, 그 측근자를 '여우 같고 계집 같'다고 부정적으로 성적 이미지를 사용한다. 여기서는 '부정·부패·비리'=여성, 좋은 정치=남성으로 성적으로 비유한다. 15)에서는 민족적 수난의 역사가 여성의 수난사로 치환되면서 정치적으로 강화되어 있다. 식민지 체험 뿐 아니라 사대주의 시대의 조선, 제국주의의 침탈, 해방기의 미·소 군정, 전쟁 등이 수난자의 형상을 구성하면서 여성성이 호출된다. 16)에서는 우리 민족 자체가 '거지 처녀' '수난의 여왕'으로 서술된다.

함석헌의 역사인식의 중요한 토대 중 하나는 '고난의 역사'이다. 이 고

117) 함석헌, 『수난의 여왕께 드리는 유언·예언』, 『사상계』 105호, 1962.3, 41쪽.
 118)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 역사 1』, 『함석헌 전집 1』 한길사, 1989, 83쪽.
 119)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 역사 4』, 『함석헌 전집 1』 한길사, 1989, 333쪽.
 120)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 역사 4』, 『함석헌 전집 1』 한길사, 1989, 330쪽.

난의 역사로서의 성서의식에 기초해 함석헌은 ‘인류역사는 고난의 역사’라 말하면서 인류사 자체를 고난의 역사로 보는 한편,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입하여,¹²¹⁾ 조선 5백년을 ‘수난의 5백년’¹²²⁾으로, 우리 민족을 ‘수난의 집’¹²³⁾이라고 표현한다. 함석헌의 고난사관은 민중을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여길 수 있게 하는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고난의 극복을 통한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주체로서의 민중’이 등장하는 기반이 된다.

수난의 여성과 관련하여서도 기독교에서처럼 ‘주체로서의 여성’이 등장하는 기반이 된다. 15)과 16)에서 수난의 여성은 17)에서처럼 ‘그 받은 고난’으로 ‘정화’된다. 이 뜻은 고난을 ‘극복’하지 않아도 고난 자체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마치 기독교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기도를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듯이 갈보, 창부 등의 수난의 여성들은 받은 고난 그 자체로 인해 정화된다. 한국역사, 한민족의 쓰라린 예속의 역사는 씨울인 ‘창부’ ‘갈보’에 의해 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나, 식민지 본국의 여성들은 할 수 없고 식민지배, 침탈 등으로 ‘수난 받은’ ‘세계의 하수구’요 ‘공창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민족이 세계인류사를 대속할 수 있는 존재처럼 언급되어 있다. 이로서 창부=민족=예수라는 등가관계가 형성된다.

그간 ‘여성 수난사’에 대해서는, ‘강대국·제국주의·외세’/“여성”을 밖/안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도상으로 형상화 하면서 여성으로 하여금 민족의 바깥에 놓인 제국에 의해 수난받는 집단 주체성으로 형상화 하였다고 언급되었다. 민족=여성의 집단 주체성으로 여성성이 동원되면서, 즉 여성은 민족에 의해 호명되어야 하는 타자화 된 존재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근대 내셔널리즘의 주체 구성 메커니즘을 반복한다¹²⁴⁾고 비판되었다.

121)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 역사 3』, 『함석헌 전집 1』 한길사, 1989, 81쪽.

122)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 역사 3』, 『함석헌 전집 1』 한길사, 1989, 171쪽.

123)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 역사 3』, 『함석헌 전집 1』 한길사, 1989, 81쪽.

124)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연구』 7, 2002, 108쪽.

하지만 함석헌에게서는 이러한 기존의 ‘여성 수난사’ 의미가 부정되고,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창부와 갈보들에 의해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정화가 이루어졌다. 함석헌의 ‘여성 수난’은 비록 성적 은유 체계를 동원하고는 있지만, 여성 수난사와 관련한 기존의 문법을 해체하고 파괴한다. 이는 기독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지의 어머니는 하늘=남성, 땅=어머니의 오래 된 비유를 지나, 함석헌에게서 민족을 대속하는 고난과 수난의 여왕이자 모든 것을 품는 대지의 어머니로 자리매김 되었다.¹²⁵⁾ 대속자와 대모신의 동일시가 가능했던 것은 노장사상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자연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제각기 평등한 가치를 가지며,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름을 중시하는 자연의 속성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제와 문명중심 사관에서는 자연과 여성이 혼돈과 불안함으로 규정되었지만, 노장의 영향을 받은 씨울사상에서 어머니는 그 자체 씨울이면서 다른 씨울을 잉태하고, 잘못된 씨울까지 품어 안는 ‘통전’의 씨울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함석헌의 씨울사상은 ‘생명변증법’¹²⁶⁾ ‘에코 페미니즘’의 영역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함석헌이 여성=어머니로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19) 역사의 새벽부터 밥을 짓는 것은 여자의 일이었다. 모든 창작과 건설의 근본이 되는 건강과 힘은 밥 짓는 여자의 솜씨에 달려 있다. 짐승의 지경을 겨우 면하던 한 옛적부터 옷을 짓는 것은 여자의 일이었다. 쉬임없이 자라나는 영원한 생명에다가 늘 새 형식을 주어 길러 온 것은 저의 힘이었

125) 함석헌은 씨울사상, 평등사상이라는 자기 사상의 주춧돌을 놓아 준 사람은 바로 어머니라 숭회한 바 있다. 녁쿨 밑에 남아 있는 어린 외를 보아 두고 따먹겠다고 했는데 누이 동생이 먼저 따먹었다는 것이다. 자신은 아들이어서 당연히 자기 차지라고 생각한 끝에 어머니에게 고자질 했는데, “애, 그건 사람 아니냐? 입이야 마 찬가지지”했다는 것이다. 함석헌, 『나의 어머니』, 『함석헌전집 4』, 304-305쪽.

126) 이규성, 『한국 현대철학에서의 두 가지 ‘변증법’과 ‘사상의 혁명’』, 『시대와 철학』, 제20권 3호, 2009 참조.

다. 문화의 첨부터 빨래는 여자의 일이었다. 새롭고 또 새롭고, 낡고 더러운 것 속에서 새롭고 깨끗한 것을 끄집어내는 끊임없는 새롭의 근원이 저에게 있다. 이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이 저에게 깃으로 준 것이 그 몸에 피어 있는 아름다움이요, 그 목소리에 들어 있는 사랑스러움이요, 그 눈동자에 깃 들어 있는 신비롭이다.¹²⁷⁾

20) 아들은 둘 속에 있는 하나요 하나 속에 있는 셋이다. ……아들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요 화해하고 하나되는 곳이다. ……엄마 그럼 아들을 낳아주! 아들만 낳아주! 마리아처럼 낳아주! 다른 것을 다 못해도 새해에 아들을 낳자! 아들만 낳으면 된다. 우리 진 빚을 단번에 다 물어줄 아들, 이때껏 패한 우리 싸움을 단번에 다 회복하고, 잃었던 우리나라를 도로 영원히 찾아줄 아들……¹²⁸⁾

19)에서는 여성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힘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성의 역할을 밥 짓고, 옷 짓고 빨래 하는 일로 제한하여 규정한다. 남녀 역할 분담론을 고착화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또 20)에서는 아들에 대한 집착과 함께 역사의 주체로 아들을 호명함으로써 여성은 단번에 역사의 주체 자리에서 끌어낸다. 즉 함석헌은 재생산노동의 주체로 여성을 호명한다. 대지의 어머니와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혼란스럽다. 어찌보면 여성을 차별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다음의 사례를 볼 때 함석헌이 여성 ‘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1964년 신동아 4월호와의 대담에서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함석헌은 “몰라, 그런 이야기 할 자격도 내게는 없어”라고 대답한다. 즉 함석헌은 여성성은 곧 모성성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여성 개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바 없었던 것으로 읽힌다. 모성성으로 이해한 결과 창부=대지의 어머니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127) 함석헌, 『젊은 여성에게 주고 싶은 말』, 42-43쪽.

128) 함석헌, 『에밀레』, 『함석헌전집 6』, 367쪽.

구체적인 여성 개인에 이르면 함석헌은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여성을 ‘근대적 개인’으로 생각한 적도 없으며, 그렇기에 근대적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평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주체로서의 인간 즉 민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지 여성 차별적이라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문제는 존재한다. 바로 이 지점, 즉 여성을 근대적 개인, 시민, 역사의 주체로 보지 않는 부분이다. 역사의 원리로는 여성을 비유적으로 동원해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회 현장 속으로 들어오면 이전에 동원되었던 여성의 의미화는 사라지고, ‘민중’, ‘역사’에서 ‘배제’된다. 작은 아들, 큰 아들을 비롯한 모든 씨을들을 어진 마음으로 보듬고 품어야 하는 어머니는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아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너무도 크고 존귀한 존재로서, 이미 그 씨을의 존재를 ‘넘어선’ 존재이다. 새 나라 주춧돌을 밟고 서있기는 ‘한라’이자 ‘태백’이지만, 이미 씨을은 아니다. 씨을을 품을 수는 있지만, 씨을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여기서 또 어머니는 감정을 가진 ‘여성’을 넘어선다. ‘남성-씨을’과 함께 사회를 이루는 분자로서의 ‘또 다른 씨을-여성’이 아니다. 어머니는 ‘전체’ ‘한’ ‘하나’에 가장 근접한 존재로서 이미 ‘개인-여성’을 넘어서 있다.

이는 여성을 개체로 보지 않는 것인 동시에, 씨을의 ‘차이’를 보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 함석헌에서 여성은 어머니로서 ‘승고’한 존재이거나 ‘성적 수난’의 대상일 뿐, 자유와 권리, 의무를 담지한 근대적 개인도 정치적 주체도 아니었다. 장준하와 방법적 차이는 있지만, 역사·사회 뿐 아니라 민중 논의에서 소거되어 있음은 동일하였다. 민중 중심의 역사관에서도 여성-개인은 역사의 주체, 정치적 주체로 설정되지 못하였다. 식민사관과 민족주의 사관을 극복하고 제국주의 및 자본주의 물질문명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대항 민주주의, 민중 국가 구성에서도 여성성은 ‘추상적 대속자’는 될지언정, ‘구체적 개인’은 아니었다. 함석헌의 역사 인식 및 정치적 대안은 ‘근대 극복’인 것 같지만, 여성 문제와 관련해 볼 때 근대 극복이 아니라 ‘근대 체제’ ‘안’에 고스란히 존재하는 ‘근대의 문법’이었던

것이다. 1950년대 『여원』이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자유와 권리, 의무와 교양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함석헌을 단순히 시대의 구속성 때문이라 보기 어렵다. 1950년대 토착 지식인의 한계라 할 수 있으며, 냉전체제 하 남성젠더 『사상계』의 특징, 그리고 이단자의 경계를 확인시킨다.

3. 개발의제와 젠더의제의 통합을 위해

『사상계』에 여성담론이 몇 편 없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다. 약 18년간의 수천 건의 논문, 기사 중 ‘여성’이란 문구가 제목에 포함된 경우는 총 7편밖에 없으며, ‘여성해방’이란 내용이 제목에 들어간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매호 마련하는 특집이나 좌담회도 여성문제를 초점화 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여성 소거’는 『사상계』의 근대화 전략 중 하나였다. ‘새로운 국민 만들기’ ‘근대 국가 만들기’ ‘자유민주주의-반공국가 만들기’ 전략에서 ‘여성 소거’는 핵심 의제였다. 정치적 근대화론 계열에서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은 ‘자유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로 주창되어 있었으며, ‘반공 로컬’의 조건 안에서만 정당성이 있는 개념이었다. 당연히 ‘보편으로서의 자유·민주’와는 거리가 있었다. 『사상계』가 수용한 자유민주주의는 냉전의 현실적 세계질서를 담고 있는 민주주의, 즉 냉전 민주주의였고, 여성-개인의 자유, 권리, 평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허용치 않는 ‘젠더화 된 자유·민주·평등’ 개념이었다. 남녀평등도 이전 논의에 비해 ‘보편-인간’의 범주로 논의한 긍정성은 있었으나, 그 구체내용은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피하는 ‘자각전환’을 이루는 것이었지 선거권, 참정권 등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진 진정한 남녀평등은 아니었다. 이는 여성-인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여성을 인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는 것이었다. 여성-개인은 ‘제거’되어 있었으며, ‘반공

로컬’ 중의 ‘또 다른 로컬’로서 ‘중첩 로컬’로 재구획 되고 있었다.

경제적 근대화가 민주주의보다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두 번째 계열에서는 ‘공산주의가 빈곤에서 싹튼다’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소위 개발담론이라 불리는 이 계열은 경제적 근대화를 위해 정치적, 경제적, 사상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첫 번째 계열이 자유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빵을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 하에 절약, 근검, 내핍 등은 상찬된 반면, 외래품 사용 등의 무분별한 각종 소비행태, 경제적 자립을 해치는 행위, 부패와 비능률, 빈곤의 악순환을 부르는 주범들, 경제적 근대화를 방해하는 공산주의 활동 등은 격렬하게 비판되었는데, 특히 여성들이 ‘타락의 주체’로 명명되면서 ‘개발담론의 주체’에서 ‘소거’되었다. 개발담론은 ‘여성-개인’을 소거하는 대신 ‘현모양처’를 호명하였고, 남녀 역할 분담론에 입각하여 여성을 ‘주부’로 위치시켰다.

개발담론에 의해 전후(戰後)는 근대와 전근대로 양분되었으며, 근대는 전세계 담론의 기준이 되었다. 개발담론은 한편으로는 자본 중심국의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저개발 로컬들의 청사진을 위해 동시적으로 동원되었다. 신생 국가들은 자기 규정권(right to self-definition)을 포기하는 대신 자기 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을 얻은 것이었다.

『사상계』 중 가장 이단자였던 함석헌의 씨울사상 역시 여성-개인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함석헌의 여성은 대모신 개념으로서의 ‘어머니’이다. 그런데 고난사관은 역사를 수난사로 인식하게 하면서 어머니를 ‘수난의 여왕’으로 위치시켰다. 외세=남성, 민족=여성이란 성적 은유의 방식으로 여성성이 동원되면서, 수난의 여성인 창부는 ‘받은 고난 그 자체’로 인해 정화되었다. 한국의 쓰라린 예속의 역사가 씨울인 ‘창부’ ‘갈보’에 의해 대속되는 것으로 논리화 하면서, 창부=민족=예수라는 등가관계가 제시되었다.

이처럼 함석헌은 여성 수난사와 관련한 기존의 문법을 파괴하고 해체

하였다. 기독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함석헌의 씨울사상은 씨울의 ‘차이’를 보지 못한 채, 여성을 자유와 권리, 의무를 담지한 근대적 개인으로, 정치적 주체로 설정하지 못하였다. 민중 논의에서도 ‘여성’은 ‘소거’되어 있었다. 신식민성 및 냉전성에 대해 인지한 경우에도 여성은 개인, 역사, 정치의 주체로 설정되지 못한 것이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계열까지 『사상계』가 호명한 여성은 결국 ‘어머니’였다. 첫 번째에서는 남녀평등을 인정하는 듯하다가 ‘성을 초월하는 어머니’로 이행하였으며, 두 번째 계열에서는 남녀평등이 아예 부정된 채 ‘현모양처’만 강조되었다. 세 번째 계열에서는 대지의 어머니를 통해 민족의 역사를 대속하려 하였다. 즉 『사상계』는 ‘여성’을 ‘근대적 개인 주체’로 호명하는 근대화론은 아니었다.

『사상계』에 나타난 ‘여성 소거’는, 1950년대 『여원』이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자유와 권리, 의무와 교양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단순히 시대의 구속성 때문이라 보기 어렵다. 이는 냉전성과 신식민성에 대해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남성젠더 『사상계』의 치명적 한계였다. ‘반공 로컬’ 『사상계』는 ‘학술교양’이란 이름 하에 ‘반공 로컬’의 정치적 경제적 철학적 과제를 ‘운동’으로서 착실히 수행한 남성젠더-이데올로그였고, 학술교양의 내포 및 외연은 ‘보편으로서의 근대지(知)’라기보다 ‘신식민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냉전지(知)였음이 밝혀졌다. 『사상계』의 ‘과학적 방법’은 자본 중심국들의 방법을 내면화 한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것이라기보다, 냉전 자유주의·냉전 민주주의, 자본주의·제국주의·식민주의 이념을 포함한 것이었고, ‘여성 소거의 사상화(思想化)’였다. 여성-개인 문제는 『사상계』의 근대화 전략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여성을 ‘보편 인간’ 범주에 위치시킨 점, 현모양처(주부)로서의 주체성을 부여한 점, 여성 수난사의 해체를 통해 세계구원자=한국이라는 제3세계 인식을 보여 준 긍정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실질 내용에서 『사상계』는 자유주의·민주주의·민족주의와 여성-개인의 불행한 결합을 보여 주었

으며, '개발(재건)과 여성'은 배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사상계』의 개발담론은 단순한 근대화 전략이라기보다 냉전체제 하의 일종의 '체제 선택'으로 기능하였으며, 젠더의 눈으로 본 『사상계』의 개발담론은 '왜곡'된 개발의제인 동시에 '실종'된 젠더의제였다. 이로써 개발의제와 젠더의제의 통합은 훗날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1. 자료

『사상계』

장준하, 『장준하문집 1-민족주의자의 길』, 사상, 1985.

장준하, 『장준하문집 2-돌베개』, 사상, 1985.

장준하, 『장준하문집 3-사상계지 수난사』, 사상, 1985.

장준하선생20주기 추모문집간행위원회, 『광복 50주년과 장준하』, 장준하선생20주기 추모사업회, 1995.

『함석헌전집』1-20, 한길사, 1983.

2. 단행본 및 논문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3.

권혁태·차승기 엮음, 『전후의 탄생』, 그린비, 2013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연구』, 7, 2002, 105-134쪽.

김대영, 「장준하의 정치평론 연구 1」, 『한국정치연구』 제11집 제2호, 2002, 157-179쪽.

김대영, 「장준하의 정치평론 연구 2」, 『한국정치연구』 제12집 2호, 2003, 151-173쪽.

김삼웅, 『장준하평전』, 시대의창, 2009.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18호, 2007, 7-60쪽.

김복순, 「낭만적 사랑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1950년대 『사상계』와 『여원』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9권 3호, 2011, 285-317쪽.

김복순, 「냉전 미학의 서사욕망과 대중감성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27호, 2012, 107-145쪽.

김봉국, 「1950년대 전반기 국민사상연구원의 설립과 활동」,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10, 1-61쪽.

김성수, 『함석헌평전』, 삼인, 2001, 189쪽

박경수, 『장준하, 민족주의자의 길』, 돌베개, 2007,

박의경, 「근대정치사상에서의 여성과 자연」, OUGHTOPIA, 2010, 155-187쪽.

박인혜, 『여성운동 프레임과 주체의 변화-여성인권담론을 중심으로』, 한울아카데미, 2011.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박태균, 『원형과 변용 -한국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사상계 연구팀,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2012.

이상록, 「『사상계』에 나타난 자유민주주의론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0, 1-258쪽.

이상록, 「함석헌의 민중의식과 민주주의론」, 『사학연구』 97, 2008, 147-190쪽.

이은경, 「1950년대 가족론과 여성」,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1-245쪽.

정진아,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사학연구』 105호, 2012, 321-365쪽.

한국여성경제학회, 『젠더와 경제학』, pearson, 2012.

함석헌 학회, 『함석헌의 비교사상적 조명』, 한길사, 2012.

- 그렉 브라진스키, 『대한민국만들기 1945~1987』, 책과함께, 2011.
- 마고사키 우케루, 문정인 해제, 양기호 옮김,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메디치, 2013.
- 베른트 슈퇴버, 최승완 옮김, 『냉전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대』, 역사비평사, 2008.
- 웬디 맥엘로이, 사은경 역, 『여성과 자유』, 나남출판, 2006.
- 테어도르 휴즈, 『냉전세계질서 속에서의 해방공간』, 『한국문학연구』, 28집, 2005, 3-57쪽.
- 필립 맥마이클, 조효재 옮김, 『거대한 역설-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2013.
- 町村敬志, 『開發主義の構造と心性』, 御茶の水書房, 2011.
- 村松安子, 『『ジェンダーと開發』論の形成と 전개』, 未來社, 2005.
- 二宮厚美, 『ジェンダー-平等の經濟學』, 新日本出版社, 2006.
- Gustavo Esteva, "Development", The Development Dictionary, edited by Wolfgang Sachs, London:Zed, 1992.

Abstracts

Gender of Academic Bildung and Cold-war Knowledge of Anticommunist-Local

-focusing on the *Sasanggye* of 1950'-

Kim, Boksoon

In *Sasanggye*, there is three theories. Initially, liberal democracy theory, the second is economic modernization theory, the third is a people's democracy theory.

Woman that is called in *Sasanggye* was the "mother" in the end. It seems to have recognized gender equality at first, but it has shifted to the mother that transcends the femininity, in the second series, gender equality is emphasized "dutiful wife and devoted mother" as denied completely. In the third series, It was trying to encompass the history of the nation through great mother (=prostitute).

They internalized the way capital center countries (Western capitalism), it is not intended value-neutral and objective, Cold-War-liberalism, Cold-War-democracy, capitalism is "how scientific" of *Sasanggye* · it is intended to include the idea of imperialism, colonialism, and the "thought of the elimination of woman".

Women's issues were not included in the modernization strategy of *Sasanggye*. *Sasanggye* showed the unfortunate combination of woman and liberalism, democracy, nationalism, Woman and development(reconstruction) formed the exclusionary relationship.

The Discourse of development of *Sasanggye* was the 'disappeared' 'gender agenda' and at the same time 'distorted' 'development agenda'

Key words : De-underdevelopment, Cold-War-liberalism, Cold-War-democracy, anticommunist-local, non-alignment, neutrality, academic Bildung, Cold-War-knowledge, development, new coloniality, elimination of woman, dutiful wife and devoted mother, prostitute, Great mother, Jangjunha, economic team of *Sasanggye*, Hamseokheon, gender agenda, development agenda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